

2007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공통요구자료(I)

2007. 10

금 융 감 독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1. 기관일반현황	3
2. 2007년도 주요업무현황	7
3. 2007년도 예산집행사항	95
4. 2007년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97
5. 2007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	135
6. 2006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	137

1. 기관일반현황

1 목적 및 기능

☐ 설립 경위

- '97.12.31일에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98.4.1)와 금융감독원('99.1.2)을 설립

☐ 설립 목적

-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주요 기능

< 금융감독위원회 >

- 금융감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 등
-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시·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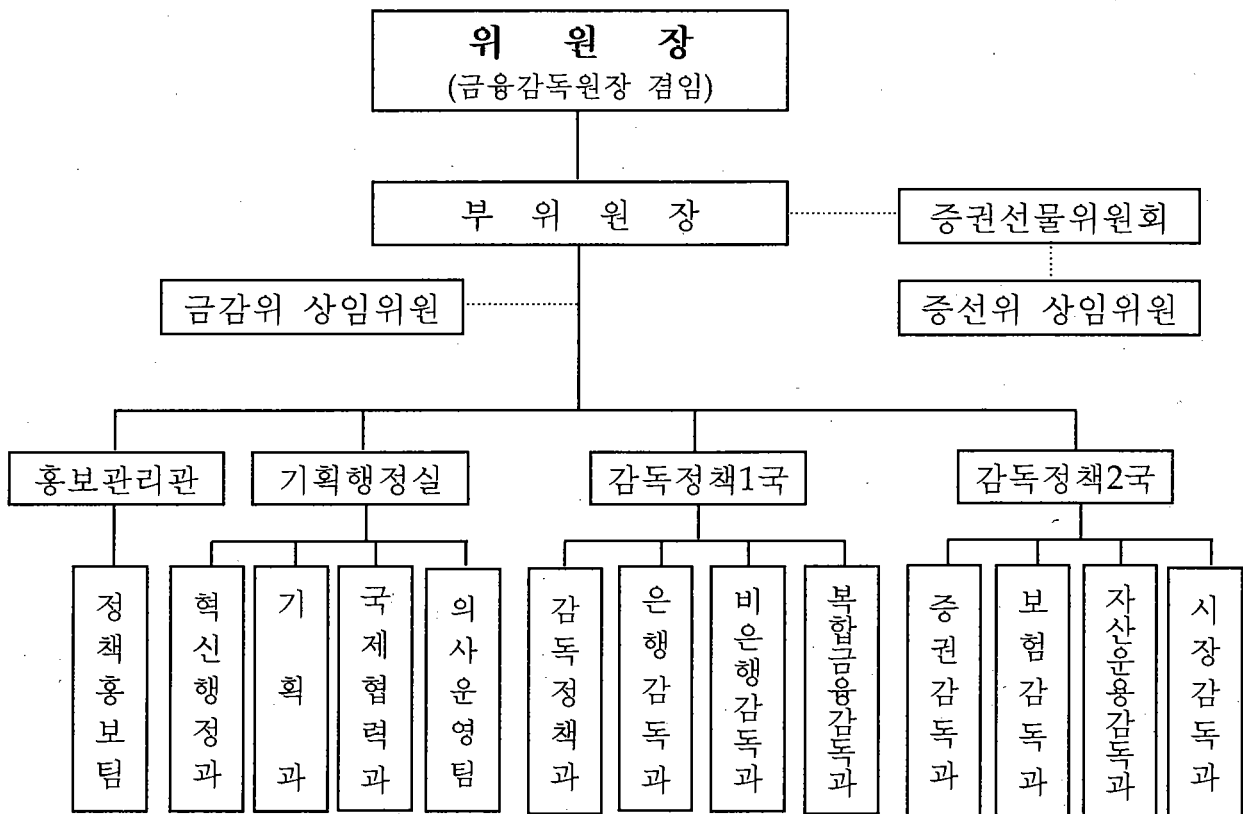
< 금융감독원 >

-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 금융기관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제재
 -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보좌

2 금융감독위원회 조직 및 정원

□ 조 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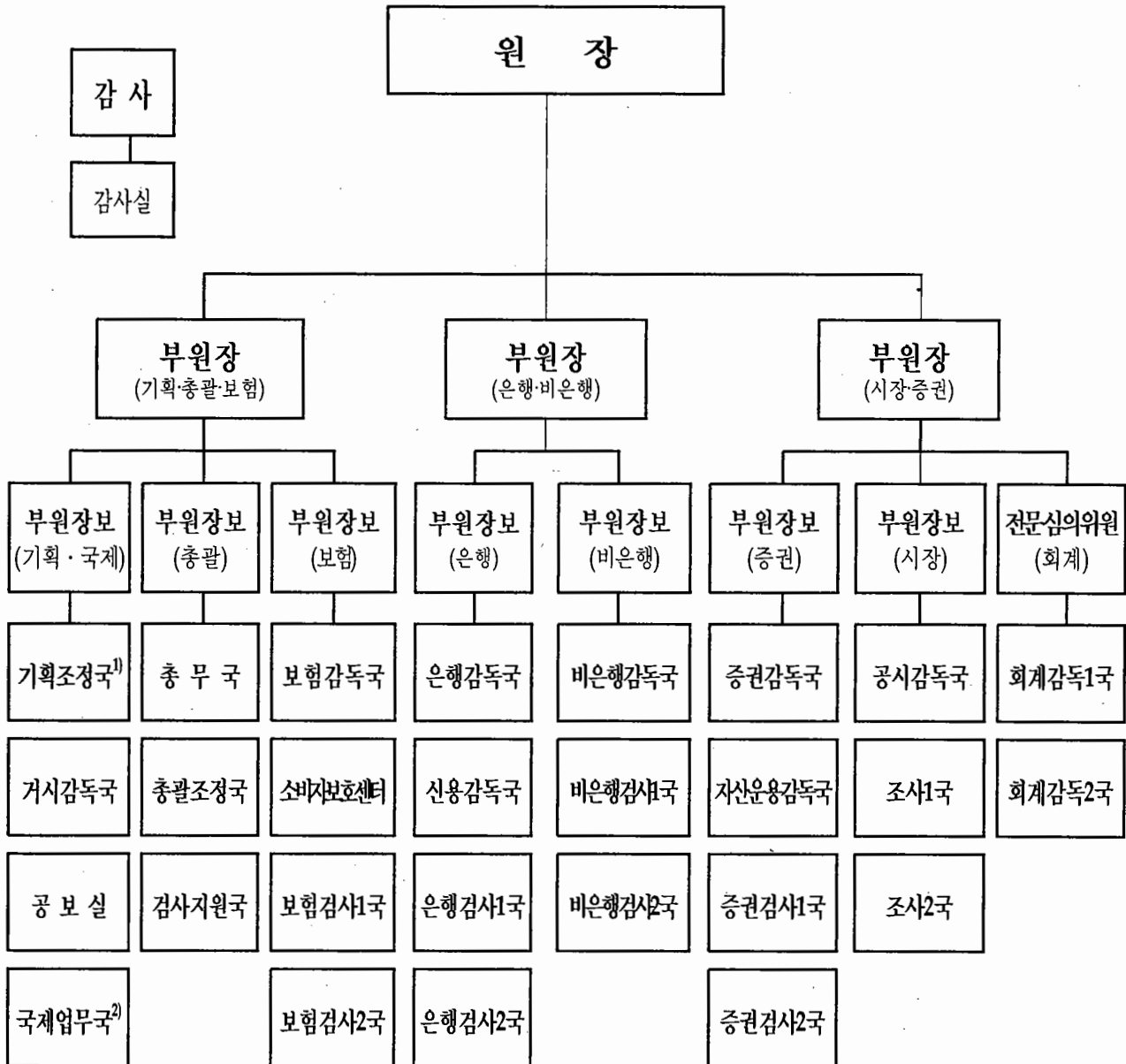
- 금융감독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안에 증권선물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 내부조직은 홍보관리관, 기획행정실, 감독정책1국, 감독정책2국으로 구성



□ 정 원 : 81명(정무직 2, 별정직 2, 일반직 69, 기능직 8)

구 분	위원장	부위원장	고위공무원		과장 (3·4급)	서기관	사무관	6·7급	기능	계
			별정	일반						
정 원	1	1	2	4	12	7	31	15	8	81

□ 조 직 : 본부 26국 2실



1) 4개 지원(대전, 광주, 대구, 부산) 포함

2) 4개 해외사무소(뉴욕, 런던, 동경, 북경) 포함

□ 정 원 : 1,589명

2. 2007년도 주요업무현황

2007년도 업무계획

2007. 2.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 목 차 >

I.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1. 이제까지의 정책추진 실적 11
2.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22

II. '07년 전략목표 및 주요 성과목표

1. 업무계획의 주요 특성 25
2. 업무계획의 목표체계 27
 - 전략목표 1 : 시장위험(risk)에 효과적으로 대응 28
 - 전략목표 2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39
 - 전략목표 3 :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53
 - 전략목표 4 : 금융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65
 - 전략목표 5 : 세계적 수준의 금융감독시스템 확립 ... 77

III. 혁신과제 88

I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1 이제까지의 정책추진 실적

- ◇ 금융감독위원회는 '98년 설립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고, 적기시정조치 등 선진 금융감독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금융시스템의 정상화 기반 마련 및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하였음
- ◇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카드사 유동성 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잠재되어 있던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감독제도를 정착시키고 선진 금융감독당국과의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 또한, 금융산업의 확대 균형발전을 추진하면서, 공시·회계 등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정비하여 자본시장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금융감독기구의 역량 제고에도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 ◇ 그간의 노력의 결과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어, 금융부문이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있음

가 IMF 경제위기 극복 시기의 금융감독('98년~'02년)

- 금융시스템의 복원을 통한 금융중개기능 정상화

- ◇ 1997년 경제위기 발생 이후 금융감독기능 효율화를 위해 분산되어 있던 금융감독기구를 통합(1998)하였으며,
- 신속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정상화 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금융감독제도를 적극 도입
- ⇒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 하는 한편,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및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기반을 구축

금융부문 개혁 추진

- 1997년의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부실금융회사의 조속한 정리 및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금융중개기능의 정상화를 추진
-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하고 명확한 원칙*하에 구조조정 추진

- * ① 부실금융회사 처리는 국내법규 및 국제규범 등에 입각하여 처리
 ② 공적자금은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과 금융회사의 자구노력을 전제
 ③ 시장규율 정립을 위해 부실책임에 대한 손실분담원칙 확립

금융권별	'97년말 총기관수	금융 구조조정 현황			신설 등	'06년말 기관수
		인가취소	합병	파산 등		
은행	33	5	11	-	1	18
증권	36	5	7	3	19	40
보험	50	10	6	4	21	51
기타*	1,984	149	167	532	70	1,206
합계	2,103	169	191	539	111	1,315

* 종금, 투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리스 등

-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수익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을 추진
 - 새로운 금융상품·서비스 개발, 수수료체계의 선진화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수익기반 확충을 유도
 -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모범사례(best practice) 발굴·확산 등 리스크 관리 내실화 및 선진금융관행 정착을 지원
 - 성과중심의 경영문화 및 선진지배구조 정착 등을 통한 금융회사의 경영체질 개선을 도모

기업부문 개혁 추진

- 강도 높은 기업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부실기업의 퇴출 관행을 확립하여 “大馬不死”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

* '97년 기준 30대 기업집단(자산 기준) 중 '06년 4.1일 현재 30대 잔존 기업집단: 13

- 구조조정 추진 5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채권금융회사 주도하에 구조조정 추진

* ①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 계열사 상호지급보증 해소, ③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④ 핵심부문의 설정, ⑤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

- 부실기업 조기정리 및 기업구조개선 협약에 의한 기업 개선작업(workout) 추진

* 워크아웃 실적('02년말 현재) : 대상 104개 중 졸업-55, 중단-16, 기타-33

-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시행 등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시스템을 구축

선진 금융감독제도 도입

- 효과적 금융감독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감독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대폭 개선
 -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여 권역별로 분산된 감독기능을 일원화
 - 국제기준에 따른 건전성 감독제도 도입
 -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BIS기준 자기자본제도 도입, 경영실태평가제도(CAMELS) 확대 시행 등 사전예방적 건전성 감독을 강화
 -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실화에 조기 대응토록 적기 시정조치제도를 도입
 - 미래상환능력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등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손실 대응능력을 제고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

증권시장의 기능 강화

-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 유도
 - 점심시간 휴장 폐지, 주식거래시간 연장 등을 통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
 - 중견·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지원을 위해 회사채담보부증권(CBO),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등 다양한 형태의 증권발행을 활성화
 - 증권선물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도입하고 조사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

나 참여정부에서의 금융감독('03년 ~ 현재)

- 금융시장의 안정, 자본시장 선진화 및 세계시장으로의 도약 기반 마련

◇ 참여정부는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경기 흐름도 악화되는 상황에서 출범

- 대외적으로 북핵문제(NPT탈퇴, '03.1), 미-이라크전 발발('03.3), SARS 발생('03.3~5)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
- 대내적으로는 카드채와 가계부채 문제 및 신용불량자 급증, 불투명한 기업회계관행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 고조

◇ 금융감독위원회는 우선 카드사 유동성 문제, 신용불량자 문제 등의 시장불안요인이 금융시스템의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 이와 함께 금융감독제도를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선진화하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도 적극 추진
- 또한, 기업공시 및 회계투명성 강화, 거래소 통합 등 시장인프라를 혁신하여 자본시장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금융의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여 선진금융감독당국과의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 금융부문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 잠재되어 있던 시장불안요인에 시스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 카드사 유동성 문제, SK 글로벌 사태 등에 적극 대응하여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시스템 불안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

- 시스템 위기 극복 이후 LG카드 등 부실한 개별 카드사는
당사자간 자율해결 원칙을 견지하여 시장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을 유도

○ 은행 및 전환증권사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서민금융
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

* 조흥은행 매각(신한지주 편입), 한투·대투증권 매각(한국금융지주, 하나지주 편입)

○ 신용불량자 종합대책('04.3)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05.3)을 추진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및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적극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활성화하여 다중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

- 장기분할상환 등을 통한 신용불량자 부담경감을 위해
배드뱅크(한마음 금융) 설립·운영을 지원

- 개인신용정보회사(CB) 활성화 등을 통해 은행의 신용평가
능력을 제고하고, 신용평가에 기초한 금융거래를 유도

* 금융채무불이행자 추이(만명) : ('03말) 372 → ('04말) 362 → ('05말) 297 → ('06말) 280

□ 중소기업대출 및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적극 유도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건전성 감독 강화와 함께 금융지원 대책을 균형있게 추진

- 중소기업대출 모니터링 강화,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대출의 내실화 추진

- 신용평가를 통한 대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CB 활성화 유도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를 개선

○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자금 흐름의 선순환을 유도

* 가계대출 총액 및 증가율(말, 조원, %) : ('99)192, 15.7 → ('00)241, 25.6 → ('01)304, 25.9 → ('02)391, 28.9 → ('03)421, 7.6 → ('04)449, 6.8 → ('05) 493, 9.8 → ('06.3/4)529, 7.3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가계 및 금융회사의 부실화 위험을 예방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부채상환비율(DTI) 하향 조정 등을 추진

- 가계대출만기의 장기화를 적극 유도하여 가계대출의 안정성을 제고

□ 시장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

○ 개별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전체의 위험징후를 신속히 발견·대처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

○ 환율·금리 변동 등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분석을 위해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모형 개발 및 운영

선진 금융감독제도 정착

- **리스크관리 중심의 금융감독제도 정착을 유도하는 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
 -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손실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예상손실률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및 신BIS협약 기준에 상응하는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을 유도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제도 등을 도입하여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부실의 근본원인을 억제
 -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RM)제도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의 리스크 규모 및 관리상태 등을 밀착 감독
 - 금융감독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 및 효과적 상시감시체계 마련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시장왜곡 방지방안 추진**
 - 재정부·공정위 등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보완책을 마련
 -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의무화 확대, 금융회사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강화,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강화 등
- **금융의 국제화 및 국경간 불공정 거래에 대비하여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추진**

* '06.12월말 현재 11개국 15개 금융감독기관과 MOU 체결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 금융산업을 21세기 핵심지식기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 등을 적극 지원

- 금융회사 대형화·겸업화 지원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및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합리화 추진
- 자산운용업의 동북아 금융허브 핵심산업으로의 육성 등 금융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성장전략을 적극 지원
- 기능별 규율체제(Functional Regulation)의 도입, 금융투자회사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추진
- 은행에만 허용되던 신탁업을 증권·보험회사에도 허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
- 방카슈랑스 도입 등 업무제휴를 통한 제공가능 서비스 및 외부위탁(outsourcing)을 확대하고,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을 도입

□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금융회사의 창의적 영업활동을 지원

- 매년 자체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T/F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금융규제개혁을 추진
-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규제에 대해 종합적인 규제개혁방안을 마련

자본시장 활성화 추진

- 자본시장 핵심인프라의 혁신을 통해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
 - 증권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거래소를 설립('05.1)하고, 청산·결제 기능의 재편 등을 추진
 - 전자공시(DART)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공시제도를 시행하는 등 공시인프라를 획기적으로 정비
 - 주식시장에 우량기업의 상장을 적극 유도하고, 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진입 및 퇴출제도를 지속 개선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증권거래법 등 관련 3법의 입법을 완료
 - 최고경영자의 공시서류 인증 의무화, 회계법인의 컨설팅 업무 수행 금지 및 주기적인 감사인 교체 의무화 등
 - 특히, 주가조작·분식회계 등을 통한 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 방지를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
-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등 증시 불공정거래 연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여 시장규율을 확립
 - 또한, 공시의무 위반기업이나 불공정거래 연루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중제재
 - 특히, M&A 등 여러 종목에 걸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하여 테마별 기획조사 등 조사 강화

변화와 혁신을 통한 금융감독역량 강화

□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

- 주요 직위 외부공모 등 개방형 인사시스템 도입, 능력·소
질에 따른 경력개발 등을 통해 감독인력의 전문성 제고
- 수요자 중심의 혁신적 감독·검사시스템 구축
 - 법규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표명하는 비조치의견서 제도(No-action letter) 도입·운영
 - 금융회사가 경영상 취약분야에 대하여 감독당국에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는 경영컨설팅 청구제도 도입
- 전문상담원제도 및 명예옴브즈만제도 등을 정착시켜 투명한
민원처리체계를 구축

□ 변화와 혁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혁신의 내재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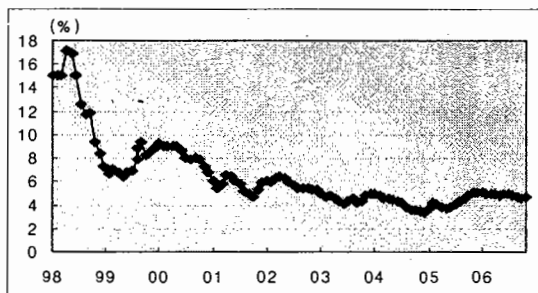
- 전담팀 구성, 각종 혁신아이디어 채널 마련 등 업무혁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혁신활동을 유도
- 학습하는 문화의 정착 및 혁신인센티브 시스템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
- 인터넷 민원 one-stop처리, 금융소비자 모니터링제도 시행
등의 업무 혁신을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

2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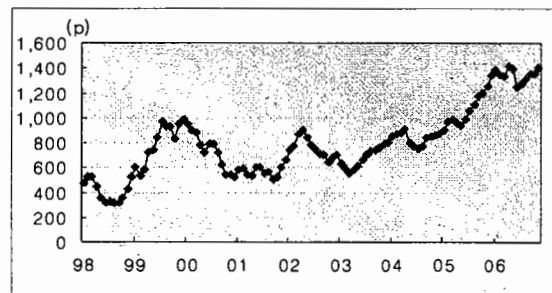
가. 정책성과 평가

- (금융시장)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복핵문제, 카드채 문제 등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나, 불안요인에 시스템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
 - 금리는 기준을 인상, 경기지표 호조 등으로 최근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준 유지
 - 주가는 참여정부 출범 전후 500p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실물경제의 호조, 기업재무구조 개선 등에 따라 견조한 상승 추세 지속(코스피 최고치('06.5.11) - 1,464.70)

국고채(3년) 연평균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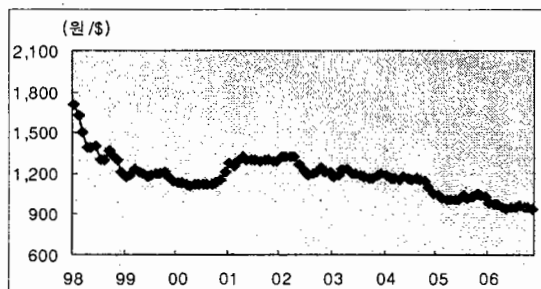


주가지수(KOS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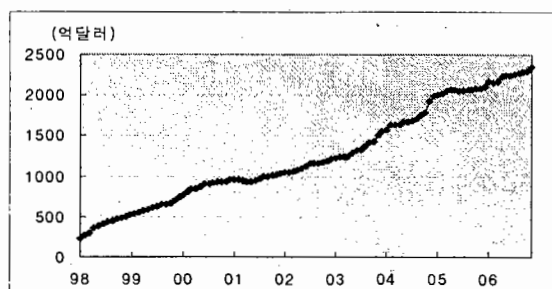


- 환율은 경제의 체질 강화를 반영하여 '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외환보유고는 지속 상승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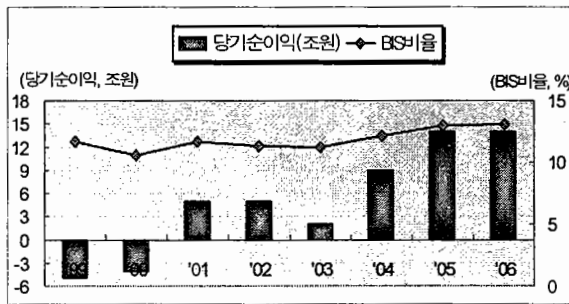
외환보유고 추이('06년말, 2,389.6억불)



□ (금융산업) 적극적인 부실정리 노력 및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 등에 따라 수익성과 건전성이 크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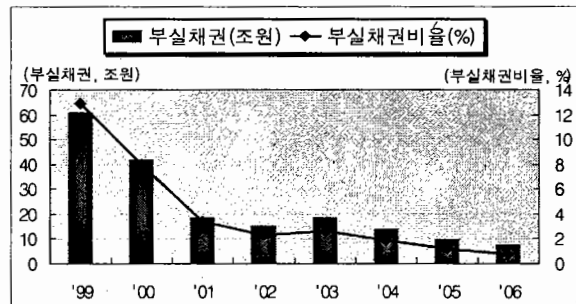
- 은행의 경우 '06년도에도 13.5조원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되는 등 금융회사 당기순이익이 흑자기조를 지속
- 재무건전성비율이 감독기준(은행 : 8%)을 상회하고, 은행 부실채권비율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1%를 하회('06년말 0.84%)

은행 당기순이익 및 BIS비율 추이



* BIS비율은 '06.9말기준

은행 부실채권비율 및 총액 추이



-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도 상승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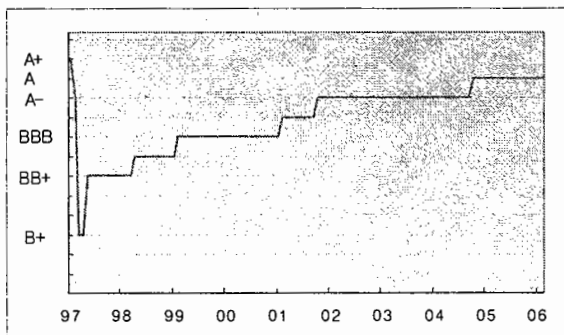
< GDP 중 금융산업의 비중 추이(단위 : %) >

'85년	'90년	'99년	'01년	'03년	'04년	'05년	'06.9월
3.84	5.23	6.98	6.82	7.82	7.34	7.50	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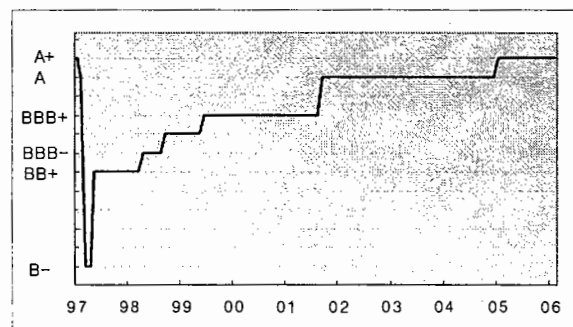
□ (대외신인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대외신인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IMF 경제위기 이전을 거의 회복

국가신용등급 추이

< S&P >



< Fitch >



나. 현 좌표 진단

□ 이와 같은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융시스템 전반의 질적 경쟁력이 국제적 수준에는 다소 미흡

○ (금융시장) 풍부한 시장유동성 등에 따라 자산시장 불안,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 일부 시장불안요인이 상존

○ (금융산업) 총자산 규모의 영세, 수익구조 다변화 미흡 등으로 인해 경쟁력 및 효율성이 아직까지 취약

- 특히, 금융회사의 규모*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영세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

* '06년 세계 100대 은행중 국내은행 수 : 4 (국민-51, 우라-87, 신한-88, 농협-96)
국내 대형 증권사의 미국 대형증권사 대비 총자산은 1.6%, 자기자본은 5.5% 수준

○ (금융감독제도) 그동안 도입한 선진제도 및 관행이 정착 되는 과정에 있어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

○ (감독역량)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 감독을 위한 기틀은 마련하였으나,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감독인력의 전문화 및 금융감독 인프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Ⅱ '07년 전략목표 및 주요 성과목표

1 업무계획의 주요 특성

< 기본 방 향 >

- ◇ 2007년은 참여정부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한 해로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의 성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
-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다져온 금융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기능을 제고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뒷받침
- 그간의 경영체질개선을 토대로 우리 금융산업을 국제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면서, 중소기업·서민금융, 고령화 대비 등의 국민 경제적 요구에도 적극 대응

□ 금감위는 동 기본방향에 따라 2007년도에 5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들은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 (전략목표 1) 시장위험(risk)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 기반을 확고히 다짐

➡ (전략목표 2)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의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를 육성

➡ **(전략목표 3)** 활력있는 선진자본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 인프라를 구축 추진

➡ **(전략목표 4)** 금융수요자 중심의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을 추구

*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 : 금융의 혜택을 사회 각 층에 널리 전파시킴으로써 국민 전체의 금융편익이 제고되고 금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증진됨을 의미(호주 건전성감독청이 2006년도 주요 감독정책목표로 규정)

➡ **(전략목표 5)** 금융감독의 전문화 및 감독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감독시스템을 확립

□ 주요정책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 추진 성과를 효과적으로 점검·평가 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

○ 주요사업과제별 성과지표는 결과 및 산출지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최대한 계량화

○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환류계획 및 혁신추진계획을 수립

-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성과를 충실히 평가하여 인사 등에 반영 추진

- 업무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등 혁신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2 업무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 금융이용자 보호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비전

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전략목표 1 시장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기반을 확고히 다짐

성과목표

- ① 가계대출 증가, 거시환경 변화 등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해 정책 공조 및 선제적 감독 강화
- ② 리스크 관리 중심의 선진 건전성 감독제도 발전
- ③ 복합금융 등 새로운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제도 정비
- ④ 금융개방화에 대응하여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강화

전략목표 2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의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 육성

성과목표

- ① 금융의 국제화 및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관련제도 정비
- ② 은행의 경영혁신을 적극 유도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
- ③ 증권회사가 국제적 투자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④ 자산운용업을 동북아 금융허브의 핵심산업으로 육성
- ⑤ 보험산업이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전략목표 3 활력있는 선진자본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인프라 구축 추진

성과목표

- ① 자본시장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수급 기반 확충 및 각종 인프라 정비
- ② 증권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독제도 개선
- ③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
- ④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제도를 선진화

전략목표 4 금융수요자 중심의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금융웰빙 추구

성과목표

- 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실화 도모
- ② 서민의 다양한 금융수요 충족을 위해 금융공급 여력 확충
- ③ 고령화 시대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 적극 지원
- ④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근절 노력 지속
- ⑤ 금융이용자의 합리적 선택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전략목표 5 금융감독의 전문화 및 감독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감독시스템 확립

성과목표

- ① 체계적인 금융감독 전문인력의 육성 및 운용시스템 마련
- ②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의 효율적 관리
- ③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감독정보시스템을 지속 정비
- ④ 감독서비스의 품질관리를 통해 정책만족도를 지속 제고

전략목표 1

**시장위험(risk)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기반을 확고히 다진다.**

< 주 요 내 용 >

- ◇ '97년도 이후 지속적인 금융구조조정 추진 및 금융시장·산업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제도 선진화 등을 통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
 - 그러나, 금융개방 가속화 등에 따라 잠재적 불안요인에 적기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
 - 특히, 최근에는 가계대출 증가, 거시변수(유가, 환율)의 변화 등에 따른 시장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 ◇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
 - 면밀한 시장모니터링 및 정책공조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 등 시장위험(risk)에 대한 선제적 감독을 강화
 - 신BIS협약 등의 도입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리스크 관리 중심의 건전성 감독제도를 정착
 - 복합금융 등 새로운 금융거래에 대한 효과적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개방화에 대응하여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 ◇ 이러한 시장위험에의 효과적 대응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기반을 확고히 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성과목표 1-1

가계대출 증가, 거시환경 변화 등 잠재적 불안 요인에 대해 정책공조 및 선제적 감독을 강화한다.

가. 주요 내용

□ 최근 들어 가계대출 증가, 유가·환율 변동, 북한 핵실험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대응이 필요

- 국내외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식별하여 감독정책상의 대응방안 강구
- 가계대출 증가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공조 등을 통한 선제적 감독을 강화
- 금융회사의 외화대출 취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외환부문에 대한 감독 강화

⇒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

전략목표

**시장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기반을 확고히 다짐**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성과목표

**가계대출 증가, 거시환경 변화 등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해 정책공조 및 선제적 감독 강화**

주요과제

장·단기 리스크 요인
분석 및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가계대출 증가 등에
따른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회사의
외환부문에 대한
감독 강화

나. 세부 추진계획

① 장·단기 리스크 요인 분석 및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른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 분석
-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실시를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 영향분석 실시

* 통계적 모형 등을 사용하여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충격에 대한 금융회사 및 금융시스템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측정

② 가계대출 증가 등에 따른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재경부,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
- 금융감독 측면에서 차주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대출 모집인 부당광고 억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조정, 단기 업적보다는 건전성위주의 성과평가 유도 등 추진
-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전성 감독제도를 지속 개선
- 중소기업대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능력 제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수준 제고 유도

③ 금융회사의 외환부문에 대한 감독 강화

- 금융회사의 외화대출 취급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외화유동성 조기경보모형」 보완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
-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이상징후 외환거래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불건전 외환거래 예방노력 강화

성과목표 1-2

리스크 관리 중심의 선진 건전성 감독제도를 발전시킨다.

가. 주요 내용

- 금융시장의 개방화 가속 등 급변하는 시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산업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기존 리스크 중심의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지속 제고할 필요
 - 은행부문의 신BIS협약 도입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
 - 증권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보험회사의 리스크 기준 자기자본제도 도입 등을 차질없이 추진
- ⇒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제고

전략목표

시장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기반을 확고히 다짐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성과목표

리스크 관리 중심의 선진 건전성 감독제도 발전

주요과제

은행부문의 신BIS
협약의 도입을 착실
하게 준비

증권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나. 세부 추진계획

① 은행부분의 신BIS협약 도입을 착실하게 준비

- 신BIS협약 도입에 필요한 「자기자본산출기준」을 확정하고, 관련규정 정비 및 감독당국내 내부등급법 승인기준 마련
- 신BIS협약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상징후 발견시 적기 대응

② 증권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 개별 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리스크 관리 최소 기준」을 마련·시행
- 증권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 대한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구축

③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 보험회사의 각종 리스크를 측정하여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정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RBC*제도 도입 방안을 강구

* RBC : Risk Based Capital

- 보험회사의 분야별 리스크 규모 및 관리능력에 따라 감독 수준을 차등화하는 리스크 평가제도(RAAS*) 시행방안을 마련

* RAAS :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리스크에 상응하는 필요자본을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등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
- 보증보험의 거대 리스크 예방을 위해 준비금 적립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성과목표 1-3

복합금융 등 새로운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 제도를 정비한다.

가. 주요 내용

-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생금융상품, 전자금융 등 새로운 금융 트렌드에 대한 감독대응능력의 강화가 필요
 - 파생상품시장 성장에 따른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감독선진화 방안 등 마련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등을 통해 IT 발달에 따른 전자 금융 환경변화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강화
- ⇒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감독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및 금융시스템 안정 도모

전략목표

시장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기반을 확고히 다짐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성과목표

복합금융 등 새로운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제도 정비

주요과제

파생상품시장의
고도화·다양화에
대응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강화

나. 세부 추진계획

① 파생상품시장의 고도화·다양화에 대응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 파생상품시장 성장 및 고도화·전문화에 대응하여 감독 시스템을 개편하고 「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
- 파생상품 취급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을 강화

②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강화

- 운영리스크가 높은 금융회사 및 장애발생시 파급효과가 큰 네트워크 집중기관에 대해 “IT경영실태평가” 실시

*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증권선물거래소, 보험개발원, 저축은행 중앙회, 신탁중앙회 등

- 새로 설립한 금융보안전담기구를 활용하여 해킹·피싱 등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응능력을 제고

- OTP* 보급 활성화 및 보안수준별 거래한도제 시행 등을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

*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ne Time Password)

- 금융전산분야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위기대응 훈련 실시

성과목표 1-4

금융개방화에 대응하여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가. 주요 내용

-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진전에 따라 외국 금융감독당국과의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시장위험요인에 대해 대처할 필요성 증대
 - 금융회사가 상호진출한 외국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감독현안 관련 양자협약에도 적극 대응
 - OECD, IAIS 등 금융감독 관련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과정에 기여하는 한편, 해외 홍보활동을 강화
- ⇒ 외국 감독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화된 금융시장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 도모

전략목표

**시장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기반을 확고히 다짐**



금융개방화 등 금융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

성과목표

금융개방화에 대응하여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강화

주요과제

외국 금융감독당국과의
감독경험 공유, 감독
현안 협의 등을 위한
협력 강화

OECD, IAIS 등 국제
금융감독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

우리 금융시장과
감독정책에 대한
해외홍보 강화

나. 세부 추진계획

① 외국 금융감독당국과의 감독경험 공유, 감독현안 협의 등을 위한 협력 강화

- 상호진출 금융회사에 대한 공동검사 등 업무협조와 감독경험 공유 등을 위해 외국 금융감독당국과의 MOU 체결* 확대

* '06년 말 현재 영국, 미국 등 11개국 15개 기관과 MOU 체결

- 특히, 미국과는 한·미 FTA체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감독 협력 필요성 증가에 대비하여, 은행·증권·보험감독당국 각각에 대해 MOU 체결을 신속히 추진

- 양자간 감독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 금융감독당국과 정보교환, 고위·실무회의 개최 등을 통한 교류*를 활성화

* '06년 중에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미국 등과 MOU에 근거하여 감독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영국(5월), 일본(12월) 등과는 고위급회담을 개최

- 「효과적인 감독을 위한 아시아 감독당국 및 대표은행 회의」('07.5)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감독당국간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준비

② OECD, IAIS 등 국제금융감독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

- BIS(은행), IOSCO(증권), IAIS(보험) 등 국제감독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과정에 기여하고 이를 국내 감독제도 개선에 활용

* BIS의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 Basel Committee in Banking Supervision), IOSCO(국제증권감독자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및 IAIS(국제보험감독자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는 금융감독관련 3대 국제기구

- 국제감독기구 회의 국내 유치에 적극 추진하는 한편, IAIS 및 IOSCO 아시아지역회의 등 '07년중 개최 예정인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준비

- 특히, 전세계 130여개국이 참여하는 IAIS 정기회의('08.2)는 그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 차질없이 준비

* '06년 중에 바젤위원회 은행 핵심준칙 검토그룹 회의(CPLG, 2월), IMF-FSC/FSS 국제컨퍼런스(11월)를 개최

③ 우리 금융시장과 감독정책에 대한 해외홍보 강화

- 외국 감독당국과 국제감독기구 등에 대하여 우리 금융시장과 감독정책 발전 현황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영문브로셔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작성 배포

전략목표 2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의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를 육성한다.

— < 주 요 내 용 > —

- ◇ 그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부실 조기 정리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를 지속 추진한 결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는 등 금융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
- ◇ 이제는 금융산업이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금융의 대형화·점업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
 - 금융의 국제화, 대형화 추세에 대응한 감독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 금융의 기초체력을 강화
 - 권역별 특성을 감안한 성장전략을 적극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금융의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 육성을 적극 추진
 - 은행의 성장잠재력 확충, 증권회사의 국제적 투자은행으로의 도약기반 마련, 자산운용업의 동북아 금융허브 핵심산업으로의 육성, 보험산업의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의 확대발전 등을 지원
- ◇ 이러한 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성과목표 2-1

**금융의 국제화 및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관련제도를 정비한다.**

가. 주요 내용

- 금융의 국제화 및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감독제도 정비를 통해 금융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할 필요
 -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화방안을 강구하고 다른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 등 감독제도를 개선
 -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 한·미 FTA 체결 등 금융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관련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정비
- ⇒ 금융회사의 국제화·대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

전략목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의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의 토대 마련

성과목표

**금융의 국제화 및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관련제도 정비**

주요과제

금융그룹의 감독
규제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의 성장
기반 확충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국내
진출 외국 금융
회사에 대한 지원
활성화

금융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정비

나. 세부 추진계획

① 금융그룹의 감독규제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 기추진한 연구용역 결과('06.8)를 토대로 마련한 「금융그룹의 연결감독 방안」의 중장기 세부추진방안을 확정
- 주요국의 금융지주회사그룹 사례 및 제도를 조사·분석하여 바람직한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를 포함한 선진 리스크 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②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의 성장기반 확충

- 선진국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조사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 검토
-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경영건전성 감독방안 마련 및 겸영업무에 대한 인가제도 개선

③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국내진출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 활성화

- 해외진출 우수사례(best-practice) 발굴,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해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지도 방안 마련

-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one-stop service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규제의 합리화를 추진
- ④ 한·미 FTA 체결 등 금융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관련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정비
-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해 감독당국간 정보공유 등 상호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보완을 추진하는 등 감독제도를 정비
 - 국경간거래, 신금융서비스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공급 증가에 대비하여 외국 공급자의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국내 금융 시장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

성과목표 2-2

은행의 경영혁신을 적극 유도하여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

가. 주요 내용

- 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는 이자수익 위주의 단순한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등 은행의 경영혁신이 필요
 - 겸영 및 부수업무 확대 등 은행의 수익성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강구
 - 은행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관행 정착 등 경영투명성 제고 유도
 - 금융기법의 다양화 및 업무범위 확대 등 은행의 새로운 업무행태에 대응하여 감독제도를 정비
- ⇒ 국내 금융산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은행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전략목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의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은행의 경쟁력 강화 도모

성과목표

은행의 경영혁신을 적극 유도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

주요과제

은행의 수익구조
개선 및 경쟁력
제고방안 강구

은행 경영지배
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은행의 신규 영업
활동 등에 대한
감독제도 정비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

나. 세부 추진계획

① 은행의 수익구조 개선 및 경쟁력 제고방안 강구

- 해외영업 활성화, 신상품 개발 등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를 적극 지원
- 투자자문업, IB업무 활성화 등 은행의 겸영 및 부수업무 확대 추진
- 금융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등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은행권 공동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② 은행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 사외이사 기능을 제정비하여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
-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완하는 등 은행 임원제도를 개선
- 상근감사위원 및 감사위원회의 경영진 감시기능을 제고

③ 은행의 신규 영업활동 등에 대한 감독제도 정비

- 은행의 업무위탁 확대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법적 감독근거 마련 추진
- 은행의 여타 금융업무 겸영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방지 장치 마련 등 감독기준 제정비

④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사회공헌활동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유도
 - 선진국의 사회적 책임 관련제도 운용 현황 조사
 - 서민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실적 공시방안 검토

성과목표 2-3

증권회사가 국제적 투자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가. 주요 내용

-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하고, 금융권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금융 투자회사의 출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 증권회사가 현재의 위탁매매중심 영업구조에서 탈피하여 투자은행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
 -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회사의 대고객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 ⇒ 증권회사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도모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금융투자회사의 출현을 적극 유도

전략목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의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증권회사의 경쟁력 제고

성과목표

**증권회사가 국제적 투자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주요과제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
기반 조성

증권회사의 대고객
서비스 수준 제고

증권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나. 세부 추진계획

①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 기반 조성

- 경영범위 확대에 따른 허가기준 등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추진에 따른 세부 감독방안 마련
- 증권회사의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와 관련하여 시스템 정비 등 철저한 시행 준비
- 대표주관회사의 자격요건 강화, 채권전문딜러 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증권회사의 회사채 인수기능을 제고

② 증권회사의 대고객 서비스 수준 제고

- 정보차단벽(Chinese Wall) 설치 강화, 투자자에 대한 고지 제도 개선 등 경영 확대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 상품 설명서, 약관 등 증권회사의 고객영업 관련 자료를 알기 쉽게 개선

③ 증권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지속 추진

- 증권회사의 대형화·전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추어 자기자본 규제제도(NCR : Net Capital Ratio)를 개선
- 증권회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PEF 출자 승인 등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외국증권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의 현지법인 전환시 인허가 요건 완화방안 검토

성과목표 2-4

자산운용업을 동북아 금융허브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한다.

가. 주요 내용

- 고령화, 금융자산 축적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자산 운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등 자산운용업의 중요성이 부각
 -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지원, 펀드운용규모 확대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 투자자 모집 등 자산운용시장의 영업관행을 선진화하고 간접투자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
- ⇒ 자산운용업이 동북아금융허브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전략목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의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금융산업에서 자산운용업의
역할 증대

성과목표

**자산운용업을 동북아 금융허브의
핵심산업으로 육성**

주요과제

자산운용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자산운용시장의 영업
관행 선진화 및 수요
기반 확충

나. 세부 추진계획

① 자산운용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진출 및 자산운용의 전문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후순위채 투자 등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파생상품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
- 종류형(multi-class) 펀드 활성화 등으로 펀드운용규모를 확대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 자산운용사별 자기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폭을 확대

② 자산운용시장의 영업관행 선진화 및 수요기반 확충

- 간접투자·금전신탁·투자일임 등 유사한 자산운용상품간 영업방식이 상품별 특성에 맞게 정착되도록 유도
-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판매 확대 및 펀드 판매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펀드 판매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
- 부동산펀드·사모투자펀드(PEF)에 대한 운용규제 개선 등을 통해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 펀드 활성화 유도
- MMF 미래가격제 시행에 따른 투자자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

성과목표 2-5

보험산업이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 주요 내용

-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위험보장 수요에 부응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
 -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보험회사의 수익기반 확충을 지원
 - 보험금 지급심사 효율화 등 보험산업 인프라를 정비하고 보험사기 등 보험시장의 불공정 행위 근절 노력을 강화
- ⇒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보험산업이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목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의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



보험의 새로운 발전 전략 추진

성과목표

**보험산업이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과제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 및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촉진 및
신시장 개척 지원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보험사기 방지
노력 강화

나. 세부 추진계획

①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및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를 확대하고 기업복지 컨설팅, 상속설계 서비스 등 보험회사의 수익원을 다변화
- PEF, 선박투자회사 등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대상을 확대하고 자회사 소유절차 간소화
- 파생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 하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②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촉진 및 신시장 개척 지원

-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고상품 심사기준을 마련
- 정형화된 보험상품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사후 감독원칙으로 변경
-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성을 감안한 새로운 보험료 산출 체계(미래 Cash Flow 방식)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

③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변액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 등 계약자의 이해도가 낮은 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채널의 전문화를 유도

- 방카슈랑스('08.4월 확대시행) 및 교차모집제도('08.8월 도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전영향분석 실시 및 부작용 방지 대책 마련
- 공보험과의 협력강화 및 보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보험 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를 효율화

④ 보험사기 방지 노력의 강화

- 보험조사협의회 확대 개편,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역량을 강화
- 보험사기 다발분야에 대한 상시기획조사 등을 위하여 「보험사기 특별조사반(SIU)」을 설치
-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지속 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
- 일부 의료기관 및 정비업체 등을 통한 보험금 누수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

전략목표 3 **활력있는 선진자본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인프라의 구축을 추진한다.**

< 주 요 내 용 >

- ◇ ‘97년 경제위기 이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공시, 회계 등의 시장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
 - 그러나 아직도 우리 자본시장은 규모나 질적 수준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 이에 우리 자본시장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인프라 정비 및 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 추진
 - 자본시장의 수급기반을 확충하고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각종 인프라를 정비
 -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
 -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감독을 강화
- ◇ 다양한 시장인프라 개선 노력들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활력있는 선진자본시장」으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성과목표 3-1

자본시장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수급 기반을 확충하고 각종 인프라를 정비한다.

가. 주요 내용

- 우리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수준의 시장으로 육성할 필요
 - 매매시스템 통합, 청산 및 결제기능의 효율화 등 증권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정비
 -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자증권 제도 도입, 수수료 등 거래비용 절감, 상장·매매 제도 개선 등을 추진
 - 해외 우량기업 및 국내 유망중소기업 등의 상장 유도를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공급기반 확대
- ⇒ 증권시장의 각종 인프라를 지속 정비하여 선진화된 자본 시장 육성의 토대 마련

전략목표

알려있는 선진자본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인프라 구축 추진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수준 제고

성과목표

자본시장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수급 기반 확충 및 각종 인프라 정비

주요과제

증권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경제 성장동력 자원을 위한 시장 수급기반 확충

자본시장 인프라 수출 및 해외시장과의 협력 강화

나. 세부 추진계획

① 증권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

- 주식선물, 국채선물 등 선물 상품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는 선물거래시스템을 통합
 - 유가증권, 코스닥, 선물 등 시장별로 운영되고 있는 매매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통합 추진
 - 증권의 청산기관(거래소), 결제기관(예탁원)의 기능조정에 따른 청산·결제시스템의 기능 효율화 방안 마련
 - 기업공시시스템(DART) 시스템을 개편하여 이용자 및 공시자료 제출자의 편의를 제고
- * 검색기능, 맞춤 서비스 제공,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의 연계 추진 등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

②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증권제도 도입 추진
- 증권 및 선물시장 유관기관 수수료 등 거래 비용 절감 노력 지속
- 국제 수준의 거래소와 비교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장·매매 관련 제도를 발굴하여 지속 개선

③ 경제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시장 수급기반 확충

- 우량기업 및 성장동력 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공시 부담을 완화 등

- 아시아 국가 등 해외 우량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적극 유도

④ 자본시장 인프라 수출 및 해외시장과의 협력 강화

- 기업공시시스템(DART), 거래소 매매 시스템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개발도상국에 수출

- 역내·외 거래소 및 자본시장 감독기구와의 협력 및 업무 공조체제 강화

성과목표 3-2

증권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독제도를 개선한다.

가. 주요 내용

- 급변하는 증권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본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를 강화할 필요
 - 시장 친화적 감독체제 구축을 위하여 규제개혁 및 감독 제도 개편 추진
 - 공시제도의 개선 및 국제공시기준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공시제도 선진화를 지속 추진
 - 신종 금융상품 등장 등에 대응하여 증권회사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감독 강화
- ⇒ 증권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제도 개선을 통해 「활력있는 선진자본시장」을 구축

전략목표

활력있는 선진자본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인프라 구축 추진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

성과목표

증권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독제도 개선

주요과제

시장 친화적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및 자율규제기구 기능 재편

공시제도의 개선 및 국제 공시기준 도입 검토

증권관련산업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강화

나. 세부 추진계획

① 시장 친화적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및 자율 규제기구의 기능 재편

- 시장 친화적 규제 체제 구축을 위하여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
- 선진사례를 참조하여 거래소 자체 상장후 시장 감시본부 등 시장 감시시스템의 개편 추진
- 통합법 시행에 대비하여 협회 등 자율규제기구의 기능 및 역할 재편 추진

② 공시제도의 개선 및 국제 공시기준 도입 검토

- ABS 등 구조화증권(Structured Securities)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시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알기쉬운 사업설명서 작성 지침을 마련
- 공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국제공시기준(IDS)*에 대한 외국사례 연구

* IDS : International Disclosure Standards

③ 증권관련 산업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강화

- CMA 등 증권회사의 신종금융상품 등장 및 활성화에 대응한 감독방안 마련

-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증권관련산업(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효과적 대응방안 검토
- 증권회사의 경영컨설팅 검사기능 강화, 내부통제모범 체크리스트 마련 등 검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 시장 인프라로서의 신용 평가업 발전을 위한 「신용 평가업 감독 방안」 수립

성과목표 3-3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가. 주요 내용

-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투자자 보호를 강화
 -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역량 집중, 조사·심리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등을 통해 신속한 조사체제 구축
 - 규제대상 내부자의 범위 확대, 벌금의 최저한도 도입 추진 등 불공정거래 규제제도의 선진화 도모
 - 조사인력의 전문성 보강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육·홍보도 적극 실시
- ⇒ 불공정거래를 척결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증권시장 참여자들에게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공

전략목표

활력있는 선진지분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인프라 구축 추진



증권시장의 시장규율 확립

성과목표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

주요과제

불공정거래에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 실시

불공정거래 규제제도의 선진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 및 교육·홍보 강화

나. 세부 추진계획

①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주가 급변동 종목 등 진행중인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적시성 있는 조사로 조사효과를 극대화
- 조사·심리기관간 정보교환, 공동조사 등 협조체제 강화로 조사의 효율성 제고
- 불공정거래 제보 활성화, 시장감시 활동 강화 등을 위해 인터넷 증권범죄신고센터(Cybercop) 정비

② 불공정거래 규제제도의 선진화

-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증권범죄에 대응하여 내부자 범위 및 규제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금이 부당이득금액 이상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 최저한도 제도 도입

③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 및 교육·홍보 강화

- 파생상품 및 현선연계 불공정거래 등에 대응하여 조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
- 『불공정거래조사지원시스템』 확대·개편으로 조사역량 강화
- 유사 증권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 조사사례 및 판례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성과목표 3-4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제도를 선진화한다.

가. 주요 내용

-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계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
 -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회계기준의 선진화 도모하는 한편,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추진
 - 연간 회계감리 회사수를 확대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본격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적 회계감독을 강화
 - '07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정착을 통해 경쟁력있는 회계인력 육성
- ⇒ 회계인프라 개선을 통해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진화된 자본시장으로의 발전을 도모

전략목표

활력있는 선진자본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인프라 구축



회계인프라의 질적수준 제고

성과목표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제도를 선진화

주요과제

회계기준의 국제
정합성 제고

기업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원활한
정착 추진

회계감리 강화

경쟁력 있는
회계인력 양성
지원

나. 세부 추진계획

① 회계기준의 국제정합성 제고

- 상장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 회계기준 등 정비
 - 감독당국 및 회계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운영하면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이행상황 점검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실무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

②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원활한 정착 추진

- 현행 기준과 별도로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마련
- 기업회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

③ 회계감리 강화

- 회계감독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연간 회계감리 회사수를 확대
- 외부감사 품질제고를 위해 회계법인 내부의 감사품질시스템에 대한 감리(품질관리감리)를 본격 실시
 - 품질관리감리제도의 운영실태 연구·교육 및 외국 회계감독기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감리기법을 선진화

④ 경쟁력 있는 회계인력 양성 지원

- 적격성을 갖춘 공인회계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07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의 정착 추진
- 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회계제도 및 감리결과 사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전략목표 4 금융수요자 중심의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금융웰빙을 추구한다.

— < 주 요 내 용 > —

- ◇ 그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체계 개선, 저축은행 등의 건전성 제고를 통한 서민금융공급여력 확충 등 금융이용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그러나, 서민·중소기업 등의 경우 여전히 상대적으로 금융접근성이 취약하고, 고령화 등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수요도 다양화되어가는 상황
- ◇ 수요자 중심의 폭넓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을 적극 도모
 - 중소기업·서민의 다양한 금융수요 충족을 위한 금융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금융지원의 내실화 도모
 - 고령화 등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 노력을 지속
 - 국민참여형 금융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확대
- ◇ 금융이용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민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성과목표 4-1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가. 주요 내용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금융접근성이 취약하고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
 -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금융회사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능력 확충 도모
 - 지역금융기관의 역량 제고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
 - 점차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의 내실화 유도
-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내실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금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

전략목표

금융수요자 중심의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금융웰빙 추구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만족도 제고

성과목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실화 도모

주요과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 내실화 도모

나. 세부 추진계획

①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평가인프라 구축

- 선진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술력 및 사업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능력이 확충되도록 지속 유도
- 중소기업 전문CB 활성화를 통해 중·소형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DB확대 및 신용정보 유통 기반 구축

②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

- 성장형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 등의 투자자금 회수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 국책은행 등을 중심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 활성화
- 은행과 지역금융기관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지역금융 기관 경영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금융서비스 강화

③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내실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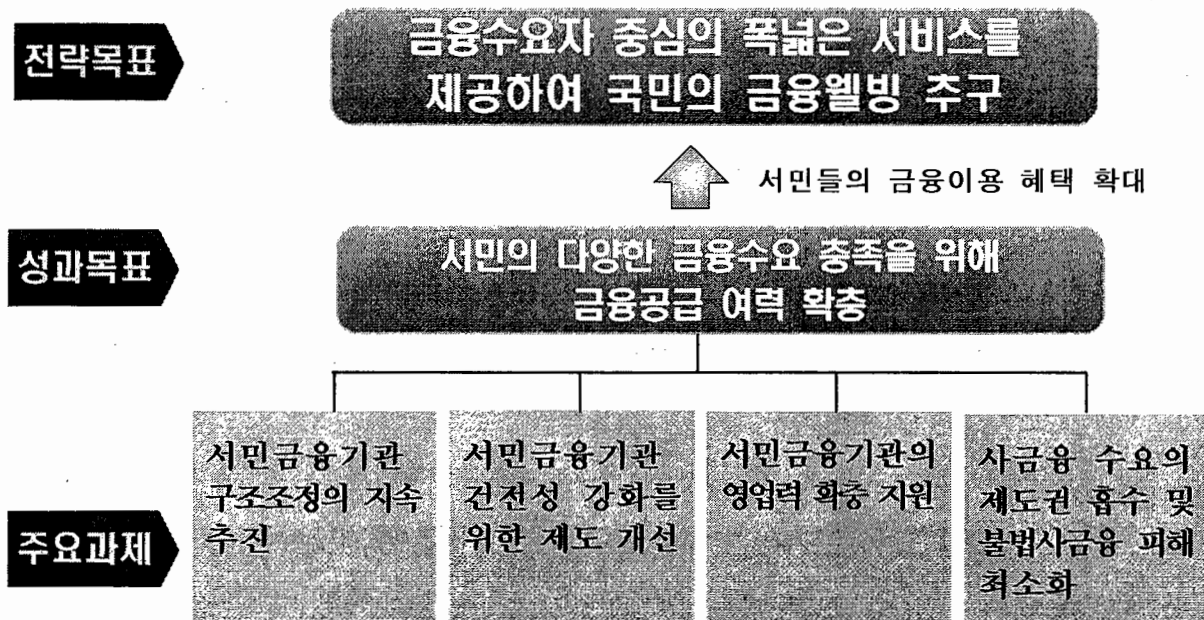
-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채무재조정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
- 채권은행이 워크아웃절차를 제도화하여 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워크아웃제도가 시장관행으로 정착되도록 지원

성과목표 4-2

서민의 다양한 금융수요 충족을 위해
금융공급 여력을 확충한다.

가. 주요 내용

- 그동안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여력을 확충해 왔으나, 예대위주의 단순한 수익구조,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여전히 서민금융기관의 건전성·경쟁력은 취약한 상태
 -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 확충을 위한 신규업무 취급허용, 영업관련 규제개혁 등 정책적 지원을 강구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금융서비스 공급 확대와 서민들의 사금융 피해 예방 노력도 더욱 강화될 필요
 - 서민의 금융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
 - 홍보·교육 및 불법사금융 단속 등을 통해 서민의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
- ⇒ 금융이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민층을 위한 금융 공급 시스템 정비 및 서민의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 강화로 서민의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을 제고



나. 세부 추진계획

①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지속 추진

- 부실우려 저축은행은 증자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되 자체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계약이전, 제3자 인수 등 추진
- 신탁중앙회 경영정상화 방안을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단위신탁의 증자,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지속 유도

② 서민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회계정보의 정확성 제고, 분식 방지 등을 위한 비상장 저축은행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 대형 저축은행의 신뢰도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은행 수준으로 건전성 감독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

- 서민금융기관 중앙회의 이사회 기능 강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위탁감독업무 확대 등으로 자율규제기능 제고

③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 확충 지원

- 서민금융기관의 수표 발행, 직불카드 발급, 수익증권 판매 등 신규업무 취급 허용 추진
-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감안하여 영업구역 광역화,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등 영업관련 규제 완화 추진
- 단위신협의 ABS발행 허용, 신탁중앙회의 대출범위 확대 등 신탁에 대한 자금조달·운용 규제 개선

④ 사금융 수요의 제도권 흡수 및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

- 은행 등 금융회사의 참여확대, 다양한 금리의 상품개발 등으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활성화
- 제도권 금융회사 조화, 사금융 피해신고, 대출 및 신용회복 지원 안내까지 망라한 『서민금융 119』 서비스의 지속적 확충을 통해 서민금융전용 포털서비스로 육성
-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홍보 및 불법 대부업체 단속을 위한 수사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 국회의 입장이 결정되는 대로 마이크로크레딧 재원으로 활용 등 휴면예금·보험금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 추진

성과목표 4-3

고령화 시대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가. 주요 내용

-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건강·자산관리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있어 이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
 - 고령화 시대에 요구되는 금융상품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
 - 노후대비 보험상품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영건강보험을 활성화
 - 역모기지 상품의 시장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감독 측면의 지원방안 강구
- ⇒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들의 금융이용 확대 및 편익 제고

전략목표

금융수요자 중심의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금융웰빙 추구



다양한 고령화 대비 금융상품의 제공

성과목표

고령화 시대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 적극 지원

주요과제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노후대비 관련 보험
상품 활성화 지원

고령자에 대한 현금
흐름 지원을 위한
역모기지 활성화 지원

나. 세부 추진계획

①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 퇴직연금가입자 등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 및 노후대비 자산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프로세스의 원활화를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의 전산시스템을 표준화
- 적립금 운용규제 개선 등으로 다양한 퇴직연금상품 공급확대

② 노후대비 관련 보험 상품 활성화 지원

- 저축, 보장 등 전통적인 보험에 은퇴준비층의 수요에 맞는 투자형 상품이 결합된 복합형 상품 개발을 활성화
-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제고를 위해 상품 표준화를 추진하고 기초통계 공유 등 공보험과의 협력을 강화
- 위험률 변동(Non-guaranteed)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리스크가 큰 분야에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확대를 촉진

* 보험가입 당시 예측한 발생률과 실제의 발생률이 상이한 경우, 중도에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

③ 고령자에 대한 현금흐름 지원을 위한 역모기지 활성화 지원

- 역모기지 상품의 시장성 제고를 위한 LTV규제 완화 등 금융감독 측면의 지원방안 강구
- 주택금융공사의 시장성있는 역모기지 상품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별 취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성과목표 4-4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완전판매
근절 노력을 지속한다.**

가.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의 불건전한 영업관행 근절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광고 관련 영업준칙 정비,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등 증권투자 인프라 개선
 - 펀드 투자권유와 관련한 투자자보호 장치 선진화 등을 통해 펀드 판매의 적합성 제고
 - 보험상품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과장광고 등 불공정한 판매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
- ⇒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특성·투자위험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책임 하에 금융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전략목표

**금융수요자 중심의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금융웰빙 추구**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신뢰도 제고

성과목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근절 노력 지속**

주요과제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한 광고 및 전문
인력 관련제도 개선

펀드 판매의 투자자
적합성 제고

보험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및 판매·
광고행위 감독 강화

나. 세부 추진계획

①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한 광고 및 전문인력 관련제도 개선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부당권유행위 방지를 위해 투자 광고 관련 영업준칙 정비방안을 마련
- 겸업확대 환경에 맞추어 금융상품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 시험제도의 세분화 등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② 펀드 판매의 투자자 적합성 제고

- 표준판매권유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펀드투자자의 투자 목적과 위험선호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판매관행 정착
- 투자설명서 등 펀드 취득권유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투자자들이 알기 쉽도록 대폭 개선
- 펀드 판매시 법령준수 여부 및 각종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

③ 보험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및 판매·광고행위 감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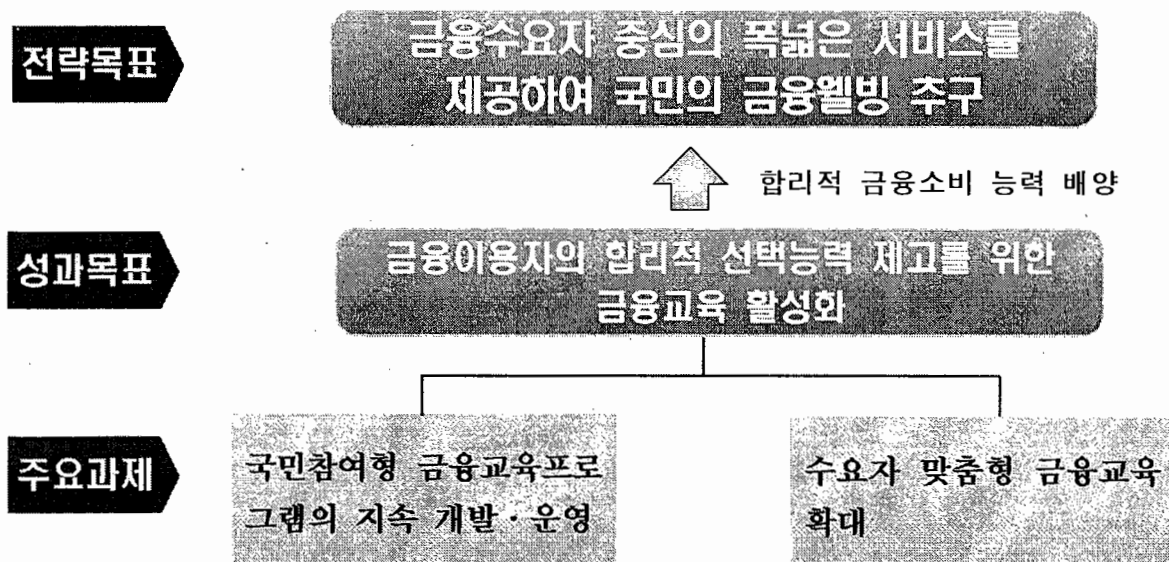
- 일반 보험소비자가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보험상품 설명서 제도를 도입 · 시행
-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회사 공시내용 실태를 점검하고 공시 대상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보험약관을 지속 정비하고 보험약관 중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
- 홈쇼핑 등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및 특별이익 제공 등 불공정 판매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를 강화

성과목표 4-5

금융이용자의 합리적 선택능력 제고를 위하여 금융교육을 활성화한다.

가. 주요 내용

- 금융교육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인식은 점차 향상되고 있으나, 학교·사회에서의 금융 교육은 양적·질적 수준이 저조
 - 금융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학교 금융 교육 강화로 미래의 합리적인 소비자 양성
 - 금융이용자 특성에 맞는 금융교육 실시 및 금융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역할 정립
- ⇒ 금융이용자 특성에 맞는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이용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금융이용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나. 세부 추진계획

① 국민참여형 금융교육프로그램의 지속 개발·운영

- 청소년의 금융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청소년 금융 백일장을 개최
-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공모대회 개최
- 다양한 계층의 금융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금융퀴즈대회를 상시적으로 개최
- 금융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TV 프로그램 지원 및 각종 영상물, 포스터 제작·배포

②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

- 전국 초·중·고 대상 금융교육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금융교육을 지원
- 교사를 위한 금융교육 교재 및 지도서 제작·배포
-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거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도용 책자 및 안내자료 제작·배포

전략목표 5 **금융감독의 전문화 및 감독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감독시스템을 확립한다.**

< 주 요 내 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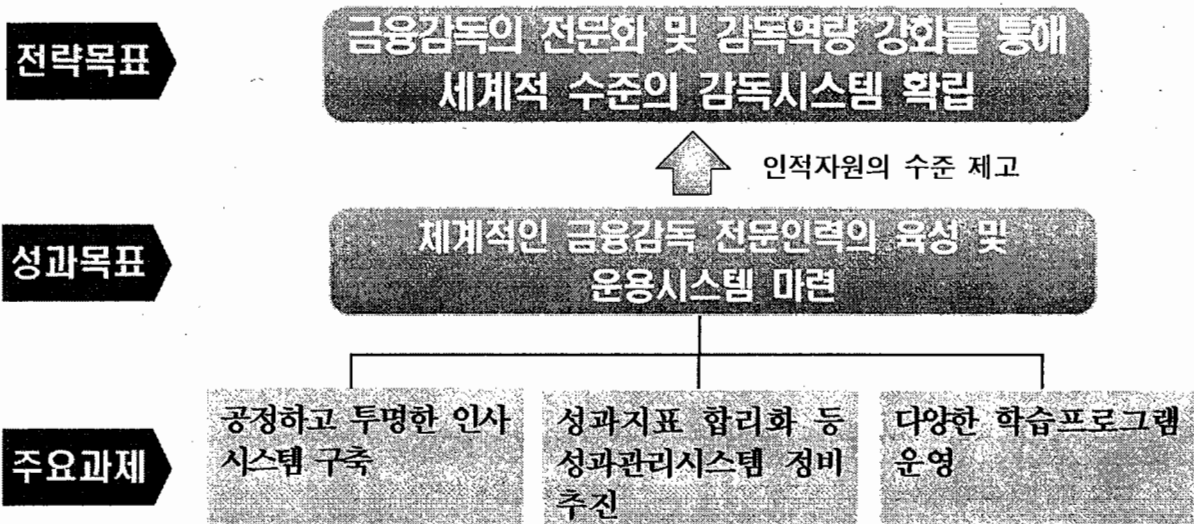
- ◇ 그 동안 금융감독 수준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인력 충원, 금융회사별 전담검사역(RM) 도입 등의 다양한 노력을 경주
 - 그러나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효과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전문성 및 감독인프라 측면에서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응 노력이 요구
- ◇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금융감독 역량강화를 적극 추진
 -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조직정비를 도모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 효율적 업무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보화 사업을 지속 추진
 - 감독서비스 제공자로서 금융회사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정책 만족도를 제고
- ◇ 감독역량을 강화하여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임무달성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토대 마련

성과목표 5-1

**체계적인 금융감독 전문인력의 육성 및
운용시스템을 마련한다.**

가. 주요 내용

- 복잡화, 다양화하는 금융감독 업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금융감독인력 육성 및 운용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공직의 외부개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 성과주의 문화와 수요자중심의 금융감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과지표 합리화, 성과에 기초한 상여금 지급 등 성과관리시스템 정비를 적극 추진
 -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 노력도 병행
- ⇒ 금융감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금감위의 임무와 비전을 효과적으로 달성



나. 세부 추진계획

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 승진, 전보, 유학 등에 있어 엄격한 기준 정립 및 공개를 통해 인사운용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 공모직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외부의 유능한 인재영입을 적극 추진
- 계약직 채용을 활성화하여 민간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공직의 개방성도 제고시켜 나갈 계획
- 회계, 불공정거래, 정책홍보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채용
- 인사관리의 정보화 제고를 위해 평가, 복무내역 및 교육 훈련 등 인사관련 사항은 「e-사람」 사용을 의무화
-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

② 성과지표 합리화 등 성과관리시스템 정비 추진

- '07년도 도입예정인 업무관리시스템상의 각종 보고서, 업무실적의 상위자 평가 등을 통합 성과관리시스템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안 강구
- 단위과제별 성과지표 개발을 촉진하고 지표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학습을 강화
- 성과지표 매뉴얼과 자체 성과관리 매뉴얼에 대한 교육 실시

- 시스템 운영결과에 대한 조직내 피드백(feedback)을 실시하여 개인평가 가감점 사항 조정 등 평가체계를 개선
- 성과상여금 지급시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평가결과를 반기별로 반영
 - 전직원에 확대 적용된 통합성과 평가를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활용하고, 성과상여금 차등폭도 중앙인사위에서 제시한 표준안보다 확대 적용할 예정

③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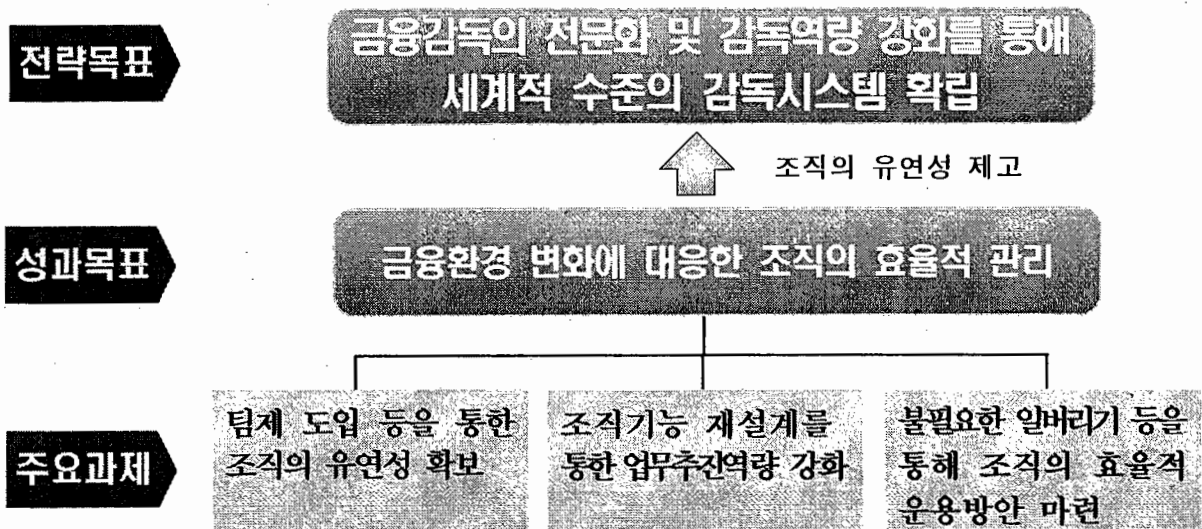
- 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의 강화
 - '07년 의무적 교육훈련 시간제(연 100시간) 도입과 연계하여 자율적 상시학습시스템 구축
 - * 교육훈련은 가급적 혁신관련 교육 40%, 직무관련 전문화교육 40%, 자체 직장교육 20%를 이수토록 유도
- IOSCO, BIS, IAIS 등 국제감독기구에서 개최하는 금융세미나 및 OJT에 적극 참여 등을 통해 직원들의 국제적 감각 제고
- 국내외 금융전문가와 학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학습동아리 등의 자발적인 학습활동 지원을 강화

성과목표 5-2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가. 주요 내용

- 금융감독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하여는 조직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관리할 필요
 - 팀제 도입 등을 통한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현안 발생시 T/F구성을 통한 민간전문가의 활용 등을 통해 조직운용의 효율화를 도모
 - 조직기능의 재설계를 통하여 조직의 업무 수행능력 제고
 - 유사 중복업무 발굴·개선, 불필요한 일버리기,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조직의 기능을 효율화
- ⇒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유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감독업무 수행 역량을 제고



나. 세부 추진계획

① 팀제 도입 등을 통한 조직의 유연성 확보

- 업무의 범위가 분명하고 독자성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팀제 도입을 적극 추진
- 불가피하게 발생한 단기 현안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

* 각 전문분야별로 외부전문가 POOL을 구성

② 조직기능 재설계를 통한 업무 추진역량 강화

- 조직 및 업무를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조직관리 계획을 마련
- '06.3월 행자부에 제출한 중기인력운용계획('06년~'10년)을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③ 불필요한 일버리기 등을 통해 조직의 효율적 운용방안 마련

- 업무분석을 통해 유사·중복 및 불필요한 일 버리기 추진
- 신속한 업무처리 및 권한의 분산을 위해 과장급 위임전결 수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권한의 하부위임 추진

* 현재 과장급 위임전결 비율(61.2%)을 2010년까지 70%수준으로 확대

- 민간 자율규제기관에의 업무 위탁을 지속적으로 추진

성과목표 5-3

업무성과 제고를 위하여 감독정보시스템을 지속 정비한다.

가. 주요 내용

- 금융감독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첨단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추진
 - 금감위·증권위의 안전처리 전과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 안전의 작성, 상정, 의결, 사후관리 등 안전처리의 모든 프로세스를 정보화
 - 통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사용자 편의 향상
- ⇒ 업무의 능률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화시대의 효과적 금융감독시스템을 확립

전략목표

금융감독의 전문화 및 감독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감독시스템 확립



업무능률의 제고

성과목표

업무성과 제고를 위해 감독정보시스템 지속 정비

주요과제

금감위·증권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나. 세부 추진계획

① 금감위·증권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금감위·증권위의 안전처리 전과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추진 방안 등 **정보화전략계획** 마련
 - 안전처리의 전과정을 파악하고 사용자의견을 수렴하여 목표시스템 주요기능, 구축방향 등을 확정
- 전략계획을 토대로 안전의 작성, 상정, 심의·의결, 사후 관리 등 모든 안전처리 프로세스의 **정보화** 추진
 - 감독정책 수립과정에서 기존 안전과 논의과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 및 분류 기능 제공
- 안전관리시스템을 전자회의시스템, 통합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등 여타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용자 편의 제고
 - 금감원 등 관련기관에서도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내부시스템과 안전관리시스템의 연계** 추진
-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안전의 보안강화를 위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모든 사용자의 접속기록, 파일 다운로드 정보 등을 기록관리 추진

성과목표 5-4

감독서비스의 품질관리를 통해 정책만족도를 지속 제고한다.

가. 주요 내용

-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로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 정책만족도를 제고
 - 선택과 집중에 의한 리스크 중심 검사체제 정착을 통해 감독역량을 극대화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 금융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영컨설팅 등 맞춤형 검사업무 확대
 - 적극적인 이미지 개선작업을 추진하여 권위적·경직적 기관이라는 기존 인식을 타파
- ⇒ 감독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와 이미지 개선을 통해 금융감독의 정책만족도를 제고

전략목표

금융감독의 전문화 및 감독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감독시스템 확립



효율성 제고 및 이미지 개선

성과목표

감독서비스의 품질관리를 통해
정책만족도 지속 제고

주요과제

사전에방적 검사시스템
정착을 통한 검사
효율성 제고

경영컨설팅 등 맞춤형
검사업무 확대 실시 및
제도 운영의 내실화
도모

감독당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추진

나. 세부 추진계획

① 사전예방적 검사시스템 정착을 통한 검사 효율성 제고

- 금융회사의 경영평가결과를 반영한 검사주기와 투입인력의 차등 운영 등 리스크평가결과와 연계한 검사시스템 운영
- 외부기관 및 자체 모니터링, 토론회 등을 통해 RM제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
-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상태 등 경영상태를 적시에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업무보고서에 대한 종합분석시스템 구축

② 경영컨설팅 등 맞춤형 검사업무 확대 실시 및 제도 운영의 내실화 도모

- 금융회사의 수요조사를 통해 경영컨설팅 확대
 -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검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경영컨설팅 매뉴얼 마련
- 경영컨설팅 결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하는 등 경영컨설팅 제도 운영의 내실화 도모

③ 감독당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추진

-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 이미지(2005 이미지조사 결과) 개선을 위해 기관PR 광고 추진
- 기존 금감위 홈페이지에 금융 관련 정보와 지식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금융정보포털」 기능을 보강하는 등 적극적인 PCRM 실시
-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 포털사이트들과 협조하여 콘텐츠 제휴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홍보 강화

III 혁신과제

〈 혁신추진 성과 및 '07년 추진방향 〉

(그간의 혁신추진 성과)

- ◇ ‘세계적인 금융시장, 신뢰받는 금융감독’이라는 혁신비전 아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다양한 혁신활동을 전개
 -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확대개편
 - 수요자 지향적인 감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담검사역(RM)제도, 경영컨설팅 청구제도 등을 도입
 - 감독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각종 정보화시스템 통합 및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기반 마련
- ◇ 이러한 혁신활동의 결과 금융감독기구의 혁신브랜드인 전자공시시스템(DART)은 10대 혁신브랜드에 선정되었고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등도 정부혁신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

(‘07년 혁신추진 기본방향)

- ◇ 보다 일 잘하는 금융감독기구를 구현할 수 있도록
 - 그동안 추진해 온 혁신을 시스템화·제도화하여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혁신활동에 대한 평가·환류 강화
 - 창조적이며 적극적으로 정책과제를 해결하는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학습과 토론 실시

혁신과제 1

온라인 정부업무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한다

가. 시스템 구축현황

- 금감위의 업무를 기능별·목적별로 분류(총 482건 07년 1월말 기준)하여 기능분류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기반 마련

* 단위과제 : 415건, 관리과제 : 67건

- '06.11월 중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07.1월부터 전면 시행

- 금감위 포털시스템(e-FSC)과 연계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리하게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나. 활성화 계획

① 과제분류

- 새로운 업무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단위과제와 관리과제를 점검하고 과제 신설·삭제 등 정비 실시

* 가급적 기존에 분류한 단위과제를 활용하도록 권고

② 과제관리

- 분류된 단위과제와 관리과제에 대해서는 즉시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활용실적을 월별로 점검 실시

* 과제관리카드 내용의 충실성에 대한 정성평가와 중간점검 실시로 카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유도

③ 문서관리(온라인 보고)

-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모든 보고와 결재가 업무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행되도록 적극 유도
- 매월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 건수를 점검하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사용기준: 문서관리카드 건수/ Σ {전자문서 생산건수+문서관리카드 건수} $\times 100$
(목표 : 70% 이상, 문서관리카드 작성 체크리스트 준수시 가점 부여)

④ 일정·일지 관리

- 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출근과 동시에 일정을 등록하고 퇴근시에 일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 월별 일정관리 활용실적을 혁신마일리지 등에 반영하여 실적 평가 실시

* 사용기준 : 1인당 일정과 일지 등록 건수(목표 : 1일 1건 이상)

⑤ 회의·지시 관리

- 각 담당자별로 소관 회의체를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회의시 마다 회의일정, 안건 및 회의결과를 기재토록 유도
- 지시사항 관리를 위해 지시사항 주관부서에서 이행실적을 수시 확인하고, 처리시한을 예고

* 사용기준 : 전체 안건건수/등록된 회의체 (목표 : 월2건 이상)
실적이 등록된 지시건수/ 전체지시건수 (목표 : 70% 이상)

혁신과제 2

민원처리시스템을 혁신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한다

가.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홈쇼핑 등 상품판매채널 다변화 등 금융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 기존의 감독당국 민원처리방식으로는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민원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그리 좋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이에 기존의 민원처리 업무방식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민원처리 업무방식을 도입해야 할 시점

□ 주요 추진내용

- 기존 민원처리 방식에 대한 면밀한 진단 및 보완을 통해 감독기구에 대한 민원만족도를 제고
 - 민원 유발 유형에 대한 자체 분석 및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민원 불만요인을 파악하고 만족도 제고를 위한 로드맵 마련
 - 민원전문상담원과 분쟁조정 전문위원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을 통해 민원 처리 및 분쟁조정의 공정성 확보

-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간 민원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
 - 전산시스템의 공유를 통해 금융민원 이첩, 자율조정 의뢰 및 자료제출 요청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
 - 특정 민원이 급증한 경우 전산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경고토록 하여 금융회사와 이를 공유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기대효과

- 민원업무역량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민원만족도 제고
- 문서작업 감소, 공문송달에 소요되는 우편비용 절감, 민원처리시간 단축 등 민원업무의 효율성 증대 도모
- 자동적출된 민원유형을 분석하여 원내 유관부서 및 금융회사에 전파하여 민원확대를 억제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조기에 예방

나. 세부 추진계획

- ☐ 금감위/원 민원처리시스템 개선 실무TF 구성(1/4분기)
- ☐ 민원업무처리 시스템 제고를 위한 로드맵 마련(2/4분기)
- ☐ 새로운 민원처리시스템 도입 방안에 대하여 금융기관들의 의견을 수렴(2/4분기)
- ☐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민원관리시스템 개발 및 가동(3/4분기)

혁신과제 3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제출시스템 개선을 통해 감독업무의 품질을 제고한다

가.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현재 금융회사로부터 수시로 제출받고 있는 업무보고서의 서식이 약 1,200여종에 달하고 있고
 - 금융회사의 수작업에 의존한 보고서 작성으로 작성부담이 과중하고 보고서 내용을 분석·가공하여 업무에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
-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보고서 작성부담과 제출부담을 줄이고 감독·검사업무에 보다 쉽게 활용하도록 혁신적인 시스템 개발이 시급한 실정

□ 주요내용

-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의 정비 실시
 - 업무보고서 분석을 위해 각 부서별 담당자들과 금융업협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실무TF를 구성하고, 불필요한 보고서 및 중복보고서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보고서와 중복된 보고서를 대폭적으로 통폐합하는 등 업무보고서 내용을 정비
- * 검사국별 검사사전자료 제출서식도 정비

- 업무보고서 작성부담을 보다 완화하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국제표준 전산언어인 **XBRL*** 도입 추진

*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계량화된 재무정보의 작성·유통·분석이 용이하도록 '99년 「XBRL International」이 제정한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

- 주요 선진 감독당국의 **XBRL 도입·활용 사례 연구 실시**
- 현행 업무보고시스템 분석 및 기술도입 방향 검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컨설팅 실시**
- **예비테스트(Pilot Test)**를 통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스템 도입

☐ 기대효과

- 업무보고서 정비와 XBRL 도입으로 금융회사들은 보고서 작성부담이 대폭 완화됨
- 업무보고서를 보다 쉽게 분석·가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감독·검사업무를 실시가능하게 됨
- 보고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됨으로써 상시감시 기능이 강화되며, 현장검사 축소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완화

나. 세부추진계획

- ☐ 실무TF 구성 및 업무보고서 정비('07년 상반기)
- ☐ 선진국의 도입사례 조사 및 외부 컨설팅 실시('07년 상반기)
- ☐ 예비테스트(Pilot Test) 및 사업자 선정('07년 하반기)

3-1. 2007년도 예산집행사항

□ '07년 예산의 9월말 현재 집행률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향후 주요 집행 소요 내역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증 (△)감액	이용 이체액				
합계	12,116	-	-	-	-	12,116	6,993	57.7	
인건비	5,127	-	-	-	-	5,127	3,386	66	4/4분기 인건비 및 명예 퇴직수당 집행예정
기본경비	3,028	-	-	-	-	3,028	2,048	68	진행중인 연구용역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집행예정
국제금융협력사업	40	-	-	-	-	40	-	-	불용처리 ^{주)}
혁신과제추진사업	71	-	-	-	-	71	18	24.6	정책만족도조사, 외부전문가 초빙 강의, 혁신관련인쇄비 등 집행예정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사업	35	-	-	-	-	35	10	30	혁신워크숍 개최 등 4/4분기 집행예정
정보화지원사업	583	-	-	-	-	583	5	1	정보화사업 용역비 및 자산 취득비 4/4분기 집행예정
IBRD차관 원금상환	2,236	-	-	-	-	2,236	1,099	49.1	하반기 원금상환 예정(10.15)
IBRD차관 이자상환	996	-	-	-	-	996	427	42.9	하반기 이자상환 예정(10.15)

주) 해당사업은 금감위 직원을 영국대학 석사과정에 파견하는 사업(한·영장학사업)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부서 자체유학을 위한 별도정원을 불허함('07. 1. 18 통보)에 따라 불용처리함

3-2. 금융감독원 2007년 예산집행사항

□ 2007년도 지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8.31현재)	집행율
인건비	143,320,540	87,460,876	61.0
경 비	68,993,633	33,585,169	48.7
자본예산	7,799,711	1,302,120	16.7
예비비등	15,002,839	674,335	4.5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16,475,134	-	-
합 계	251,591,857	123,022,500	48.9

4. 2007년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07년 상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2007. 7

금융감독위원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I. 점검개요	101
1.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01
(1) 총 평	101
(2) 주요성과	102
2. 점검 기본 방향	106
II. 상반기 이행상황	107
1. 추진실적 요약	107
2. 관리과제별 목표달성도	124
III. 향후 과제	133

I. 점검 개요

1.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 현황

(1) 총 평

-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5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69개의 주요정책과제를 추진중
 - 시장위험(risk)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기반을 확고히 다짐(전략목표 1)
 -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의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를 육성(전략목표 2)
 - 활력있는 선진자본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 인프라 구축을 추진(전략목표 3)
 - 금융수요자 중심의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을 추구(전략목표 4)
 - 금융감독의 전문화 및 감독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감독시스템을 확립(전략목표 5)
- ◇ 주요정책과제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의견수렴 등 추진과정에서의 적정성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
 - 상반기에 추진해야 할 56개 과제 중 53개의 과제가 정상 추진 중
 - * 하반기 추진예정(6개), 인사·조직·정보화 분야(7개) 과제는 점검대상에서 제외
 - 과제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 정책 효과 및 장·단점을 충실히 분석하였고, 분석결과에 따라 보완대책도 마련
 - 거시지표 및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과제 추진시 반영하는 등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
 - 계량적 지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2) 주요성과

전략목표 1 : 시장위험(risk)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 기반을 확고히 다짐

- ☐ 가계대출 증가, 거시환경 변화 등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공조를 활성화하고 선제적 감독기능을 강화
 - 매월 금융동향점검회의를 개최('07.5~)하는 등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리스크관리방안 마련
- ☐ 은행의 신BIS협약 도입을 위한 규정화를 완료('07.6)하고, 보험회사의 리스크평가제도(RAAS)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07.3)하는 등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제를 지속 강화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대응하여 금융기관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과 전자금융업 인·허가 심사를 실시('07.6)
- ☐ 동경에서 개최된 한·중·일 금융감독 세미나('07.3) 및 통합금융감독자 회의('07.6)에 참석하는 등 국제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

전략목표 2 :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의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를 육성

- ☐ 금융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금융지주를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제도 시범평가를 실시('07.5)하고, 자통법 제정과 관련하여 증권회사의 겸영업무 확대를 추진('07.6, 재경위 통과)
- ☐ 금융의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여 은행 해외진출 지도방안을 마련('07.2), 5개은행 12개점포의 해외진출 사전협의 실시('07.4)

- 은행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은행산업 발전방안 마련 T/F**를 구성('07.5)하고, 은행연합회 주관하에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를 발간하는('07.4) 등 은행의 경영혁신을 적극 유도
- **채권전문딜러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07.3)하고, 협회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증권사가 국제적 투자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중
- 자산운용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후순위채권 투자제한을 완화**(‘07.3)하고, 유사 **자산운용상품간 구분기준**을 마련 중('07.7, 자산운용업감독규정 개정 예정)
-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통해 5월말까지 58건(관련금액 129억)의 보험사기사건을 적발하고 유관기관과 12회의 업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사기방지 노력을 지속

**전략목표 3 : 활력있는 선진자본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장 인프라 구축을 추진**

- **선물시장 단일규정을 마련**하여('07.1) 시험시장을 운영('07.6~)하고, 중국·베트남 기업 대상 **상장설명회 개최**, 독일('07.1)·이집트('07.5) 거래소와 **MOU 체결** 등 자본시장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정비
 - * 중국기업 대상 상장설명회('07.4~5), 베트남 기업대상 상장설명회('07.4)
- 다단계 자금모집을 통한 신종 시세조종행위(4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07.6)하고, **시장경보체제 강화방안 마련**(07.6)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
 - 아울러, 인터넷 증권범죄 신고센터, 조사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용역을 의뢰('07.6)하고 불공정거래 사례 및 조사기법 연구회를 개최(4회)하는 등 조사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

□ 회계제도의 선진화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경주

-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회계기준원 등과 T/F를 구성하여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단과 저작권 계약을 추진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중소기업적용해설서의 초안을 공개('07.6)하고, 1,523개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82개 법인에 관련법 준수를 촉구 예정
- 연간감리 계획을 수립하여('07.2) 상반기 중 총178개사에 대한 감리 완료 및 4개의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

전략목표 4 : 금융수요자 중심의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금융웰빙(financial well-being)을 추구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07.4)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채권은행의 워크아웃실적 및 제도의 내규반영 여부를 점검하여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의 내실화 도모

* 프리보드의 지정을 거친 성장형 벤처기업에 대한 상장 후 매각제한을 완화

□ 신탁중앙회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서를 체결('07.6)하고, 105개 저축은행의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여부를 점검('07.6)

□ 대부업체 불법광고 실태를 조사하여 393건을 경찰 등에 통보하고, 서민맞춤대출 서비스 확대* 및 사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등을 통해 사금융 피해 예방

* 우리은행 참여를 유도, 대출환승론, 신용회복무료 상담전화 시행 등

□ 퇴직연금 사업자 전산시스템 표준화를 완료('07.6)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자산관리 교육을 지원('07.4)하는 등 퇴직연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

- 펀드, 보험 등에 핵심설명서제도*를 도입하고, 펀드판매회사 영업점 실태점검 실시('07.5), 보험약관 모니터링 실시(연중)를 통해 불완전 판매 근절 노력을 지속

*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핵심설명서에 기재하고 금융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는 제도

- 청소년 금융백일장 개최('07.5),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모('07.5), 시범 금융교육(15개 학교) 등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 금융권역별 분쟁조정사례 토론회 개최('07.3)하고, 무료법률 상담 및 분쟁전문위원 위촉 등 민원처리체계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증진

전략목표 5 : 금융감독의 전문화 및 감독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감독시스템을 확립

- 감사역 종합연수('07.1) 실시, 경영컨설팅 매뉴얼 발간('07.4) 등을 통해 감독역량 향상을 도모
-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네이버·KBS 등에 감독당국 현안에 관한 광고를 실시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이미지 개선을 추진

2. 점검 기본방향

- 자체평가 매뉴얼상의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토대로 내실 있는 평가 실시
 - 자체평가 기본방향 설명회(4.18), 매뉴얼 설명회(6.11)를 개최하여 실무자들이 사전에 평가지표 등을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토록 유도
 - 전략목표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위원들에게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 매뉴얼 등을 사전에 송부하여 주요정책과제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분기별 점검 외에도 자체평가위원들을 PCRM(polic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고객으로 지정하여 정책자료를 지속 제공
 - 소위원회별 심의를 통해 유관과제별로 집중적인 토론을 거침으로써 심도있는 평가 실시
- 단순한 실적점검에 그치지 않고, 대안제시 등을 통해 하반기 주요정책과제 추진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평가
 - 정책 추진실적이 저조하거나 목표 달성도가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
 - 우수한 정책과제 추진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함으로써 정책목표 달성도를 제고
 - 필요할 경우 평가과정에서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 등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II. 상반기 이행상황

1. 추진실적 요약

<상반기 추진실적>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1 가계대출 증가, 거시환경 변화 등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해 정책공조 및 선제적 감독 강화			
장·단기 리스크 요인 분석 및 조기경보 시스템 등 운영	· 단기 리스크 요인 분석보고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등 총 12회 단기 리스크 요인 분석	정상추진
	· 조기경보모형 분석보고서	○매월 금융위기 상시감시지표(early warning) 점검(6회) ○조기경보모형 유의성 검증(6월, 진행중)	정상추진
	· 금융리스크 종합 분석 보고서 작성	○2007 금융리스크 분석 국문판 자료 발간('07.1) ○2007 금융리스크 분석 영문판 자료 발간('07.4)	정상추진
가계대출증가 등에 따른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도모	· 가 계 대 출 모 니 터 링	○주택담보대출 증감 현황 일보 작성 진행중 ○일일 금융시장점검지표 작성중	정상추진
	· 대출채권 부실 징후 선행지표 정기분석	○국내은행 대출자산에 대한 부실징후 분석('07.4) -분기별 분석 실시중	정상추진
	· 카드사 과당 경쟁 현황 파악	○신용카드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 규제근거 마련(여전법 개정안 규개위 심사중) ○신용카드 표준약관 도입 추진(T/F 구성·운영중, 4월)	정상추진
	· 연체전이율 등 부실선행지표 개선방안 검토	○부실선행지표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중('07.6. 착수)	정상추진 -8월 완료예정
	· 가 계 대 출 관 행 개 선 제 도 개 선	○DTI한도, LTV 및 채무상환능력 평가 중심의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여신심사체계 개편(은행)('07.3.) -모범규준의 비은행권으로의 확대 추진('07.6.) ○주택담보대출 소비자보호방안 시행 및 향후 추진 과제('07.4.)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리스크 현황 및 감독방향('07.4.)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대책의 감독규정화('07년 제4차 자개위 부의('07.6.))	정상추진
금 융 회 사 의 외 환 부 문 에 대한 감독 강화	· 외화대출 및 외환거래 점검(상시)	○은행부문의 외화대출 및 외화차입 동향분석(수시) ○금융회사에 대한 외환 건전성 비율 현황점검(매월) ○국내 및 외은지점의 외화차입 등 영업 상황에 대한 매10일 기준 점검(4월 이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례 적발 및 조치(129건) ○인터넷 해외송금 거래 모니터링 추진(6월) 등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2 리스크 관리 중심의 선진 건전성 감독제도 발전			
은행부문의 신BIS 협약 도입을 착실하게 준비	· 은행별 준비 상황 점검, QIS 실시	○ 6월반기 승인신청을 위한 은행준비상황 점검(07.5) ○ 신BIS협약 규정화 관련 금감위의결 완료(07.6)	정상추진
증권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 증권회사 리스크 관리 최소기준 마련·시행	○ “차별적인 리스크관리 최소기준” 마련 및 보고(’07.3)	정상추진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 리스크평가 제도 시행 방안 마련	○ 리스크평가제도(RAAS) 세부운영방안 마련 및 해설서 발간배포(07.3)	정상추진
1-3 복합금융 등 새로운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제도 정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등 금융환경 변 화에 대응한 리 스크 관리 강화	· 금융보안 전담기구 업무개시	○ 금융기관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 홈페이지 보안점검을 의뢰한 금융기관 (26개)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 ○ 인터넷뱅킹용 보안·인증서 관리프로그램 취 약점 점검 - 은행 인터넷뱅킹용 키보드보안 및 인증서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취약점 점검 ○ 금융 IT 및 정보보호대책 지원 - 전자금융 사고방지를 위한 ‘금융보안패치 시스템’ 구축 추진 - 금융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보안적합성 시험	정상추진
	· 전자금융업자 인가·등록	○ 등록대상 전자금융업자 약 40여개와 등록관련 업무협의를 하였고, 이중 20개사가 등록완료(6.22), 6월말까지는 대부분 등록이 완료될 예정 - 등록을 위한 신청인과 업무협의 : 약 100여 회(업체당 2.5회) - 등록요건 점검 시 인적·물적 등의 요건을 점검하기 위한 실지조사 : 40회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의무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전자금융업 등록을 촉구하는 보도자료 배포(3월)	정상추진
	· 위기대응 연습 실시	○ NSC 요청에 따른 금융전산 분야 위 기대응 현장점검 실시(’07.6) - NSC, 금감위와 공동으로 금융기관의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의 활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전산 분야 위기대응”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1-4 금융개방화에 대응하여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강화			
외국 금융감독 당국과의 감독 경험 공유, 감독현안 협의 등을 위한 협력 강화	· 한 · 중 · 일 금 융 감 독 세미나 참석	· '07.3.22(동경) · 간부 및 실무급 21명 참석	정상추진
	· Effective Regulation Meeting 개최	· '07.5.10(서울) · 아시아지역 주요국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기관, 국제투자은행, IIF 대표자 등 총 60여명	정상추진
OECD, IAS 등 국제금융감독 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	· World Bank 자 본 시 장 세미나 참석	· '07.3.1~3.3(하노이) ·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고 등 관계자 50여명	정상추진
	· 통 합 금 융 감독자회의 참석	· '07.6.5~6.9(동경) · 전세계 16개국 감독기관 수장 참석	정상추진
	· 아 주 지 역 보험감독자 회의 개최	· '07.6.26~6.28회의 개최 · 아시아21개국 60명 참석	정상추진
우리금융시장과 감독정책에 대한 해외홍보 강화	· 홍 보 자 료 작성 계획 수립	검토중	지연 (하반기 예정)
	· 감 독 당 국 소 개 자 료 작성 · 배포	검토중	지연 (하반기 예정)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1 금융의 국제화 및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관련제도 정비			
금융그룹의 감독규제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 경영실태평가 제도 시범평가 (제2차) 실시	○ 우리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제2차 시범평가 실시 (5.9~6.8)	정상추진
	·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주요국 사례 조사	○ 美, 英, 日의 사례에 대하여 금감원 해외 사무소를 통하여 조사 중	정상추진
경영·부수업무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의 성장기반 확충	· 선진국의 금융회사 업무 범위 조사	○ 보험업 : 해외사례조사 완료	정상추진
	· 경영·부수업무 범위 확대방안 마련	○ 보험업 :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에 요청 ○ 은행 : 은행산업 발전방안과 연계하여 검토 ○ 증권 : 자통법 제정으로 경영업무 확대 추진 중(재경위 통과)	정상추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국내진출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 활성화	· 국내 은행 해외진출 지도방안 마련	○ 07년 국내은행 해외진출 지도방안 마련 (07.2) ○ 5개은행 12개점포에 대해 해외진출 사전협의 (07.4)	정상추진
한·미 FTA 체결 등 금융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관련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정비	· 감독당국간 협력의 법적 근거 보완을 위한 추진방안 마련	○ 재경부와 2차례 사전협의 ○ 국제증권감독기구 등과 협의중	정상추진
	· 외국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등록 요건 마련	○ 등록요건 마련필요성에 대해 검토중	정상추진
2-2 은행의 경영혁신을 적극 유도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			
은행 경영지배 구조개선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 지배구조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및 법령 개정 사항 재경부 건의	○ 은행산업발전방안 마련 T/F 개최 (07.5,07.6)	정상추진
은행의 신규 영업 활동 등에 대한 감독제도 정비	· 모집인 감독 근거 마련 등 은행법 개정 의견 제출 및 협의	○ 금감위합동간담회 보고후 검토의견 재경부송부(07.1)	정상추진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은행의 사회 공헌활동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검토중	지연
	· 경영진면담등을 통한 자금중개 기능 강화 유도 (상시)	○ 연합회주관하에 연합회 및 은행별로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발간(07.4~5)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3 증권회사가 국제적 투자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 기반 조성	• 채권전문딜러 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	○ 증권업협회 주관으로 증권사 채권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 '07.3~5월 중 3차례 회의 개최	정상추진
	• 채권전문딜러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시장조성 의무요건 개선 등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07.4월) 및 개선방안 마련중	정상추진
	• 채권전문딜러 관련 관계 기관과 협의 및 여론 수렴	○ 관계기관 협의 (협회주관 협의체 구성) 및 의견수렴 (업무협조문 발송, '07.4월)	정상추진
	• 인가/등록 심사방안 마련	○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가 등 심사방안 마련 중	정상추진
	• 대표금융기관 및 업계의 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1)	○ RBS 등 관련 시스템 수시 점검	정상추진
증권회사의 대고객 서비스 수준 제고	• 외국의 이해 상충 방지체계 관련 사례 및 자료 조사	○ 외국사례 조사중	정상추진
	• 약관·상품설명서 등 실태 자율 점검	○ 증권업협회 위임검사 범위에 약관, 상품설명서 등 포함('07.3)	정상추진
증권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 외국증권사 지점의 현지 법인 전환시 허가요건 완화 방안 마련	○ 하반기중 추진예정 (법령 개정사항)	정상추진
	• 해외자기자본 규제제도 조사	○ 미국, 영국, 일본의 자기자본 규제제도 조사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4 자산운용업을 동북아 금융허브의 핵심산업으로 육성			
자산운용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펀드의 후순위 채권 투자제한 완화	○ 후순위채권 투자제한 완화 방안 발표 (2.22) -고수익고위험펀드에서의 후순위채권 투자 허용 -일반펀드에서도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후순위채권투자 허용 ○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후순위채권 투자제한 완화(3.14)	정상추진
	· 펀드매니저별 운용펀드 수 공시	○ 펀드 대형화 추진방안 업무브리핑 실시(2.22) -펀드대형화 추진방안 중 펀드매니저별 운용펀드 수 공시 검토 ○ 자산운용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실무TF 운영(3-5월) -소규모펀드 통폐합 관련 자산운용업계 건의사항 마련 ○ 금감위/원, 협회실무TF 운영(5월~) -업계의견 검토 -운용사별 소규모 펀드 현황공시 방안 검토 -펀드매니저별 운용펀드 수 및 소규모 펀드 현황 공시(6월말)	정상추진
자산운용시장의 영업관행 선진화 및 수요기반 확충	· MMF 미래가격 제도 보완방안 마련	○ 거래당일의 시장정보를 활용한 수익자간 불균형 문제 발생여지가 없는 다음의 MMF 거래는 당일결제를 허용 ○ 판매회사 자율적으로 일정한도내에서 MMF 수익증권을 당일공고된 기준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판매회사 자율적으로 MMF 수익증권 담보 대출 시행 ○ 증권회사 자율적으로 주식 등 유가증권 위탁매입시 MMF 수익증권을 대용증권으로 활용	정상추진
	· 유사 자산운용 상품간 구분기준 마련	○ 연구원, 업계 및 감독기관 공동 T/F에서 개선안 마련(4월) ○ 공청회를 통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5.10) ○ 구분기준 관련 감독규정 개정 예정(7월)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2-5 보험산업이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보험사기 방지 노력의 강화	· 보험사기 조사협의회 확대 개편 및 특별조사반 설치	○보험사기조사협의회 관련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추진 ○특별조사반 운영방안 마련('07.2.27) 및 인사발령('07.4.11)	정상추진
	·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활용한 보험 사기 조사 활성화(상시)	○보험사기 적발 총58건 관련금액 129억원 ('07.5월말 기준)	정상추진
	·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강화(상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회 (12회 '07.5월말 기준) ○수사기관의 자료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46건, '07.5월말 기준) ○심평원에 대한 자료요청(3회, '07.5월말 기준)	정상추진
3-1 자본시장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수급 기반 확충 및 각종 인프라 정비			
증권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	· 선물상품 매매 제도 단일화 방안 마련	○ 선물시장 단일규정 마련 ('07. 1.16 관 련규정승인)	정상추진
	· 선 물 상 품 거 래 시 스템 단 일 화 방 안 마련	○ 선물시장 시스템 단일화 추진일정마련('07.2월) -현재 시험시장 운영중('07.6월 ~ 8월)	정상추진
	· DART 원격 제어 시스템 도입	○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완료 및 본가동(3.7~)	정상추진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마련	○ 실물증권의 전자화 세부방안 마련(07.3) -외부용역 및 세미나 개최 (06년)	정상추진
경제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시장수급기반 확충	· 성 실 공 시 기업의 공모 절 차 관 련 의 건 수 령	○ '잘 알려진 기업'(WKS)에 대한 공모절차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T/F팀 (증자T/F) 운영방안 마련	정상추진
	· 중국 등 해외 기업 대상 상장설명회 개최	○ 중국기업 대상 상장설명회 (길림성, 북경, 청도, 섬서성, 사천성 등 5회, 07.4~5) ○ 베트남기업 대상 상장설명회 (07.4) ○ 중국 및 베트남 기업방문 40여회(07.1~6)	정상추진
○ 자 본 시 장 인프라수출 및 해외시장과의 협력 강화	· 외국 거래소와 증권정보 등 교류추진	○ 독일거래소와 MOU 체결 (07.1.30) ○ 이집트 카이로거래소와 MOU 체결(07.5.31)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3-2 증권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독제도 개선			
시장친화적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및 자율규제기구 기능 재편	· 시장 관련 규제 개혁 사항 의견 수렴	○ 규정개정시 의견 수렴 (개별면담, 홈페이지 게시, 서면의견수렴 등)	정상추진
3-3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 실시	· 조사·심리 기관간 협조 체제 강화	○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기준 개선(07.1) -적시대응이 필요한 중대사건 우선 조사 및 특별조사팀 투입 ○ 증선위 심의안건 충실화 등 불공정 거래사건 업무처리절차 개선(07.1) ○ 다단계 자금모집을 통한 신종 시세조종 행위(4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07.3~6) -증선위 위원장 긴급조치로 검찰 이첩(07.3, 6월) ○ 조사업무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절차 정비 -이의제기방법 사전고지 등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업무절차 개선(07.2) -조사국 문답실의 CCTV 설치(07.4) -CCTV운영지침 마련(07.4)	정상추진
	·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적시성 있는 조사 실시	○ 조사·심리기관간 현안사항 협조 강화를 위한 조사·심리기관협의회(3회, 07.3,4,5월) 및 실무협의회(수시) 개최 -조사·심리기관간 정보공유 확대(07.3) -피라미드방식 이용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방안 협의(07.4) -시장경보체제 강화방안 협의(07.5) ○ 신종 시세조종행위 신속대응을 위한 공동조사(07.3, 4건) 실시 ○ 자원개발 테마주 공동기획조사(07.6, 4건) 실시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증권 범죄신고센터 확대 ·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증권범죄신고센터(Cybercop) 확대 · 개편을 위한 시스템 개발 의뢰(07.6) -미국SEC의 인터넷제보센터 운영내용을 벤치마킹 -신고내용 세분화, 중요도에 따른 선별적 대응, Q&A 신설 등 ○ 불공정거래 제보자 포상절차 개선(07.3) ○ 시장경보체제 강화방안 마련(07.6) -시장경보체제를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종목 3단계로 개선 -경보조치 제제강화 및 조치간 상호 연계성 강화 	정상추진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대상 내부자 범위 및 유가증권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통합법에 반영 -내부자범위에 계약체결을 교섭중인 자 등 포함 -규제대상 유가증권 범위에 타법인발행 증권도 포함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의 벌금 최저 한도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이득금액을 벌금의 최저한도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 국회 논의중 	정상추진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 및 교육 ·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 관련 연수 프로그램 운영(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업무 지원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및 시스템 개발 의뢰(07.6) -파생상품 조사지원시스템 개발 -조사원별 시장감시시스템 개발 등 	정상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 방지 교육 및 홍보(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거래 사례 및 조사기법 연구회 개최(4회) -검찰입장에서 본 불공정거래조사(1월) -시장감시강화방안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기준 등(3월) -형사법 및 형사절차(4월) -영상조사기법(6월) ○ 불공정거래 조사전문화 연수 및 신규 전입직원 맨투맨식 연수 실시(07.4)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3-4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제도를 선진화			
회 계 기 준 의 국제 정합성 제고	· 국제회계기준 도입 Roadmap 발표	○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을 위한 Roadmap* 발표(3.15) -IASB위원장, 일본회계기준위원장 등 국내·외 주요인사 참석 * 주요내용 ①'11년부터 상장사 전체에 의무적용 단, '09년부터 선택적용 허용 ②모든 공시내용을 연결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	정상추진
	· 로드맵 이행사항 점검 1차 T/F 회의 개최	○ 로드맵 추진기획단 1차 T/F 회의 개최(5.23) -로드맵 이행을 위한 검토과제 및 세부 추진일정 보고(금감위) -국제회계기준 도입 진행현황 및 향후 일정 보고(기준원) -각 금융권역별 국제회계기준 도입 진행상황 보고(금감원)	정상추진
	· 국제회계기준 도입 Roadmap 일정에 따라 국내 회계기준 작업 진행	○로드맵 이행 세부추진일정에 따라 회계기준제정작업 진행중 -국제회계기준 초벌 번역 완료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과 저작권 계약 추진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재정지원방안 마련 등 ○실무 작업반 (K-IFRS T/F) 구성(5월)	정상추진
기업내부회계 관 리 제 도 의 원 활 한 정 착 지 원	·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 기준 연구 착수 - 초안마련 및 공청회 개최	○감독당국 및 회계법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팀에서 기초안 마련(3월) ○기초안 수정작업을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위원회내에 소위원회 운영(3~5월) -소위원회 회의(총 12회)를 거쳐 「모범기준 중소기업적용해설서(공개초안)」 확정(5.30) ○합동간담회 보고(6.15)	정상추진
	· 모범기준(안) 외부의견조회	○상장협,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등 13개 외부기관에게 의견조회(6월 중)	정상추진
	· 내부회계관리 제도 구축· 운영현황 점검 (사업보고서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점검)	○ 12월 결산 1,523개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이행상황을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및 운용보고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82사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준수 등 촉구 예정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회계감리 강화	· 연 간 감 리 계 획 수 립	○연간감리계획을 수립하여 제3차 증선위 (2.14)에 보고완료	정상추진
	· 상장법인 등의 개별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리 실시(상시)	○제1차 심사감리대상 회사로 98사를 선정(제4차 감리위, 6. 7) ○상반기중 총 178개사에 대한 감리를 종료	정상추진
	·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실시(상시)	○제1차 품질관리감리대상 회계법인으로 4개 회계법인을 선정(제2차 감리위, 3.29) ○상반기중 총 4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실시	정상추진
	· 외국제도 연구 등을 통한 감리 기법의 선진화 노력 지속(상시)	○외국제도 현황 파악 등을 위해 IFIAR이 주최한 Workshop 참석(5.30-31)	정상추진
경쟁력 있는 회계인력 양성 지원	· 제 1 차 시 험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 접수	○제1차시험 응시원서 접수(총 4,444명, 1월) ○학점이수소명서류 접수하여 총 5,778명에 대한 응시자격을 인정(2월)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총 4,444명에 대하여 제1차시험 응시기회를 부여(2월)	정상추진
	· 제 1 차 시 험 시행	○서울 및 지방 4곳에서 제1차시험을 실시(3월)	정상추진
	· 제 1 차 시 험 합격자 발표	○제1차시험 채점을 거쳐 합격자 1,847명 발표하고, 응시자의 시험성적을 안내(4월)	정상추진
	· 제 2 차 시 험 시험서류 및 응시원서 접수	○학점이수소명서류 접수(총 444명, 4월)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총 2,825명, 5월)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4-1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실화 도모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CB 활성화	○CB/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공공정보 확충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07.6 입법예고)	정상추진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	· 성장형 벤처기업에 대한 매각제한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규정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완료 (07.4.30) -프리보드* 지정을 거친 성장형 벤처기업에 대한 상장 후 매각제한 완화 *증권업협회가 개설한 장외시장	정상추진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내실화 도모	· 워크아웃제도 운영의 적정성 점검 지도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WO)를 운영 중인 18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WO 절차 운영 내용과 내규반영 상황을 서면점검하고 -2개 이상 은행이 동일기업에 자체WO 적용시 관련 은행 실무자 회의를 통해 공동WO으로 전환 방안 모색(07.6.15~29일) ○'07.1/4분기중 229개 중소기업을 W/O 대상 기업으로 신규 선정(총 9,452억원 지원)	정상추진
4-2 서민의 다양한 금융수요 충족을 위해 금융공급 여력 확충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지속 추진	· 신탁중앙회 경영정상화 계획 승인 및 이행약정서 체결	○자구노력 포함한 신탁중앙회 경영정상화 계획 승인(2월) -정상화계획 이행실적(1/4분기) 점검·지도(5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 체결(6월)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감위·원, 신탁중앙회	정상추진
	· 저축은행·신탁 구조조정(상시)	○신탁 : 9개 -합병 1개, 해산 6개, 파산 2개 ○저축은행 : 2개 -가교저축은행(예보)으로 계약이전 2개	정상추진
서민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저축은행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저축은행 (105개) 구축여부 점검 및 지도(6월) -104개사 : 구축완료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사금융 수요의 제도권 흡수 및 불법 사금융 피해 최소화	· 정부융자지원 사업안내 등 신규서비스 추가(서민금융 119서비스)	○ 4/4분기로 계획 변경	지연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 상담서비스 실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 신용회복 무료전화상담 시행(연중)	정상추진
	· 우량신용등급자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은행 참여유도(상시)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 우리은행 참여(5월)	정상추진
	· 서민맞춤대출 안내 서비스 등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 배포, 생활정보지 광고, 인터넷 검색광고 등 실시(상시)	○ 보도자료 배포 3건 (1월 · 5월 · 6월) ○ 생활정보지(벼룩시장) 광고(1월) ○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광고(5월)	정상추진
	· 서민의 다양한 자금수요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금리대별 대출 상품 등록 유도 (상시)(서민맞춤 대출안내서비스)	○ 「대출환승론」 시행	정상추진
	· 대 부 업 체 불법광고 등 모니터링실시 (상시)	○ 현수막 대부광고 실태조사 등 6회 실시 -393건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통보	정상추진
	·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자료 배포, 방송인터뷰 등 홍보 실시(상시)	○ 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분석(5월) ○ 사금융예방 홍보활동 -TV인터뷰 등 27건 -보도자료 1건 -강연 및 교육 6건	정상추진
	· 사금융피해상담 등 실시(상시)	○ '07.5월까지 1,403건의 피해상담 실시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4-3 고령화 시대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 적극 지원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 퇴 직 연 금 전 산 시 스템 표준화 작업	○ 퇴직연금 사업자 전산시스템 표준화 완료('07.6) - 퇴직연금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시스템표준화 작업반 구성·운영('06.6) - 독립 RK기관*(record keeping) 중심으로 인터페이스** 연결을 위한 전문(電文)표준화 작업 추진('06.7) * 독자개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자 ** 퇴직연금사업자간 연계업무 처리를 위해 사전에 협의된 전문(電文) 및 관련 장치 등을 통해 각종 데이터를 송·수신 하는 것 - 전체 RK기관 회의를 통해 전문(電文) 초안작성('07.3) - 「퇴직연금 사업자 실태점검」시 표준화 시스템 추진시 필요사항 점검('07.6) - 전문을 「퇴직연금 사업자 업무처리 모범 규준('06.9 제정)」에 반영('07.6)	정 상 추 진
	· 퇴 직 연 금 교육 및 홍 보 강화 (상시)	○ 일반인들을 대상으로하는 '노후대비 자산관리' 교육 지원('07.4) ○ 「퇴직연금가입자 교육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중('07.6) * 외부 연구용역 의뢰('07.6)	정 상 추 진
노 후 대 비 관련보험 상품 활성화 지원	· 은퇴준비층을 위한 복합상품 개발 활성화 (상시)	○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상품 개발 지원 - 특별계정 처리 및 공시 기준 마련 ('07.6. 감독 규정 개정)	정 상 추 진
고령자에 대한 현금흐름 지원을 위한 역모기지 활성화 지원	· 역모기지 상품 취급규모 확대 (상시)	○ 금년 7월부터 역모기지 상품판매 예정	정 상 추 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4-4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근절 노력 지속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한 광고 및 전문인력 관련제도 개선	•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	○ 증권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작업중	정상추진
	• 자격제도 개선 공청회 등 의견수렴	○ 연구용역결과 나온 후 공청회 등 실시 예정	정상추진
	• 투자광고 관련 영업행위준칙 정비 방안 검토	○ 증권업협회를 통한 투자광고 심의	정상추진
펀드 판매의 투자자 적합성 제고	•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서식 개정	○ 핵심설명서제도* 도입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핵심설명서에 기재하고 금융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는 제도 ○ 판매직원 실명제 도입 -판매직원이 동 설명서의 설명·교부 여부에 대해 확인 서명한 후 투자자에게 제공 ○ 자산운용보고서를 일반투자자를 위한 '기본정보'(요약)와 전문투자자를 위한 '상세정보'로 이원화	정상추진
	• 펀드 판매회사 실태점검	○ 해외투자펀드 판매실태를 중심으로 주요 판매회사 영업점 실태점검 실시 -대상 ▪ 13개 은행 (4/25~5/16) ▪ 8개 증권사 (5/14~23) -점검사항 ▪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과 판매/권유서류 관리실태 등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사항 ○ 불완전판매 소지 등에 대한 강화방안을 강구할 계획	정상추진
보험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및 판매· 광고행위 감독 강화	• 표준 보험 상품 설명서 마련	○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보험상품별 표준상품설명서를 마련·시행(07.3월)	정상추진
	•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정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상시)	○ 상품심사·민원 등을 통해 지속 발굴·개선 -'07년 상반기 중 21건 변경권고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4-5 금융이용자의 합리적 선택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국민참여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개발·운영	· TV 프로그램 지원 및 각종 영상물, 포스터 제작·배포(상시)	○ 금융교육공익광고(1~3월) : KBS, 홈쇼핑, 지하철 ○ 청소년 금융백일장 개최(4~5월) ○ 금융교육우수사례 공모(4~5월)	정상추진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	· 계도용 책자 및 안내자료 제작·배포	○ 금융교육 실시(1~6월) : 110회	정상추진
	· 교사대상 금융교육 교재 및 지도서 제작·배포(상시)	○ 어린이를 위한 금융이야기(6월) : 2,000부 인쇄 ○ 유아금융교실(6월) : 1,000부 인쇄	정상추진
	· 금융교육 시범학교를 선정(상시)	○ 시범학교 선정(3월) : 15개교, 23회 교육실시	정상추진
4-6 민원처리체계를 혁신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			
효율적인 민원처리시스템 마련	· 상반기 사례 중심의 토론회 실시	○ 영역별 토론회 실시 - '07.3.27~3.29 - 은행, 생보, 손보, 증권 분쟁조정사례	정상추진
	· 법률연수 실시	○ 부서 직원 법률연수 실시 - 소멸시효 일반이론('07.6)	정상추진
	· 반복되는 질의를 유형화하여 게시	○ 영역별 주요사례 홈페이지 게시('07.6)	정상추진
	· 전문상담원 3명 추가 채용 전문위원 위촉 및 자문제도 활용,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상시실시(상시)	○ 전문위원 위촉 - 신규위촉: 8명, 재위촉: 4명('07.2) ○ 법률상담(490건)	정상추진
금융회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민원감축	· 소비자보호 우수회사 선정 결과 활용기준 등 마련	○ 소비자보호 우수금융회사 평가제도 운영방안 마련 - 심사절차, 활용기준, 신청서류 등('07.5)	정상추진
	· 우수회사 선정 신청접수 및 심사	○ 운영방안 및 신청접수안내 통보('07.5)	정상추진
	· 민원관리시스템 개선 시 민원주의보시스템 구축을 반영	○ 주의보발령 기준 마련 중 - 과거 민원자료를 통한 시뮬레이션 실시	정상추진
민원제도를 수요자 관점에서 지속개선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연인원 500명)	○ 순회상담 실시 중(6개 지역, 6.14~22)	정상추진
	· 무료법률상담 실시(상시)	○ 무료법률상담 실시 중(6개 지역, 6.14~22)	정상추진

과제명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고
5 감독서비스의 품질관리를 통해 정책만족도 지속 제고			
사 전 예 방 적 검 사 시 스템 정착을 통한 검사 효율성 제고	· 검사역 종합 연수	○'07.1.4~1.5일간 검사지원국, 검사각국, 지원소속 검사원(약 400명)을 대상으로 검사직원 신년 종합연수 실시	정상추진
	· 금 용 감 독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07.7~8월중 실시예정	정상추진
	· RM집합연수		
경영컨설팅 등 맞춤형 검사업무 확대 실시 및 제도 운영의 내실화 도모	· 경 영 컨 설 팅 업 무 매 뉴 얼 마련	○'07.4월중 제도개요, 업무 수행절차 및 방법, 대상분야, 모범규준, 실제사례 등으로 구성된 경영컨설팅매뉴얼 발간(500부)	정상추진
	· 경 영 컨 설 팅 관련연수 실시	○'07.8월중 실시예정	정상추진
감 독 당 국 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추진	· 기 관 P R 광 고 추 진	○네이버(NAVER)에 감독당국의 현안 (주택담보 대출 관련)을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1개월간 배너광고로 등재 ○기관이미지 광고를 지상파TV(KBS) 14회, 유선방송 홈쇼핑채널(CJ, GS, 농수산) 180회 방영	정상추진
	· 홈 페 이 지 개 편 작 업	○현재 개편에 포함될 콘텐츠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중이며 프로그래밍 및 디자인 작업을 거쳐 4분기 중 완료 예정	정상추진

2. 관리과제별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 >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가계대출 증가, 거시환경 변화 등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해 정책공조 및 선제적 감독 강화	장·단기 리스크 요인 분석 및 조기경보시스템 등 운영	중장기 금융리스크 종합 분석 실적-2	1건(50%)
		조기경보모형 등 운영 실적-16	8건(50%)
	가계대출 증가 등에 따른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강화 도모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관련 제도개선 실적-5	4건(80%)
		신용카드 건전성 지도 및 제도개선 건수-12	8(66.7%)
	금융회사의 외환부문에 대한 감독 강화	외화유동성비율 분석 실적-12	50% - 매월 금융 회사의 외화유동성비율 등 외화건전성분석을 실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259	49.8% -상반기중 위반자 129명 제재
리스크 관리 중심의 선진 건전성 감독 제도 발전	은행부문의 신BIS 협약 도입을 착실하게 준비	신BIS제도 관련 규정 정비 실적 -신BIS협약의 차질 없는 도입 (0809년중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규정정비 완료 (100%)
	증권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맞춤형 리스크 관리 최소 기준 마련 -제도개선방안 마련 여부	100%
		증권회사에 대한 리스크평가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및 시험운영 실시 여부	80%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PBC비율 산출기준(안) 마련 -기준(안) 마련	70%
		RAAS 실행방안수립 -계획 수립	리 스 크 평 가 제 도 (RAAS) 세부운영방안 마련 및 해설서 발간 배포(07.3)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복합금융 등 새로운 금융거래에 대한 감독제도 정비	파생상품시장의 고도화·다양화에 대응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파생상품시장 감독을 위한 시스템 개편 -조직개편여부	정상추진 -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복합금융 감독과를 신설
		리스크 관리수준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1	하반기 측정계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강화	OTP도입 실적 -전년대비 50%이상	정상추진 - 금융기관별 로 도입을 추진 중
		전자금융분야 위기대응 훈련실적-1	정상추진 -위기대응메뉴얼을 수정하고, NSC·금감위 합동으로 금융기관 위기대응 현장점검 실시
금융개방화에 대응하여 국제협력네트워크를 강화	외국 금융감독당국과의 감독경험 공유, 감독현안 협의 등을 위한 협력 강화	외국 감독당국과의 MOU 체결·갱신 횟수 3	167%
		고위·실무회의 개최 건수 - 16	150%
	OECD, IAIS 등 국제금융 감독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	국제회의 참여 횟수 - 4	120%
		국제회의 개최 횟수 - 2	100%
	우리금융시장과 감독정책에 대한 해외홍보 강화	홍보자료 작성·배포 건수 - 2	0%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금융의 국제화 및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관련 제도 정비	금융그룹의 감독규제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연결감독방안 확정 -연결감독방안 확정 진행률100%	30%
		경영효율화 방안 마련 -경영효율화방안 마련 진행률100%	60%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등 개정 여부	2차 시범평가 실시
	겸업·부수업무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의 성장기반 확충	겸업·부수업무 확대 방안 마련 -방안마련여부	방안마련 (보험부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국내진출 외국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 활성화	겸영업무에 대한 인가 제도의 개선 - 규정개정여부	법령개정 후 마련 필요시 규정개정 예정
		해외진출 지도방안 마련 -1	100%
	한·미 FTA 체결 등 금융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관련제도를 글로벌 스탠 더드에 맞도록 정비	외국계 금융회사의 의견에 따른 규제개선 검토 실적 -100	외국계 금융회사 패널 구성('07.4)
		감독당국간 정보공유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보완 -근거보완	재경부와 2차례 사전협의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와 협의중
은행의 경영 혁신을 적극 유도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	은행의 수익구조 개선 및 경쟁력 제고방안 강구	외국 금융서비스 공급자 등록 요건 마련 -근거마련	등록요건 마련 필요성에 대해 검토중
	은행의 신규영업 활동 등에 대한 감독제도 정비	은행지 선정 세계 100대 은행 선정개수 - 5개이상	은행지 미발표
	은행 경영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사외이사제도 등 임원제도 개선 실적 - 1건이상	재경부건의 완료
	은행의 신규영업 활동 등에 대한 감독제도 정비	대출모집인 제도 관련 감독 기준 정비 - 기준 정비	추진중
		은행 영업행위준칙 T/F운영 실적 -2회 이상 T/F 운영을 통해 은행 영업행위준칙 개선방안 검토	추진중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공헌활동 평가방안 수립 실적 -평가방안수립	사회공헌활동 보고서발간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증권회사가 국제적 투자은행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 기반 조성	통합법 제정에 따른 세부 감독방안 수립 (법령·규정개정 등)	50%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위한 철저한 시행 준비 (시스템정비 등 준비)	자통법 국회심의과정에서 직접참가방식으로 변경
		증권회사의 회사채 인수기능 강화 (규정 개정)	진행 중
	증권회사의 대고객 서비스 수준 제고	이해상충방지방안 마련 (법령·규정개정 등)	30%
		증권회사 영업관련 자료 개선 (규정개정)	30%
	증권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자기자본 규제제도개선 (규정 개정)	30%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법령 개정 등)	진행 중
자산운용업을 동북아 금융허브의 핵심산업으로 육성	자산운용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공모펀드 평균규모 -전년도 평균규모이상	'06년 공모펀드 평균규모 : 362.5억원 '07년 공모펀드 평균 규모 : 375.0억원 달성률 : 100%
	자산운용시장의 영업관행 선진화 및 수요기반 확충	공모펀드 수탁고 증가율 -가계금융자산증가율 이상	'07.5월말 현재 공모펀드 수탁고 증가율 : 6.97% 가계금융자산증가율 : 6월말 한국은행 산출 예정 달성률 : 미정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및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생명보험회사 수입 보험료 : 69조원 손해보험회사 원수 보험료 : 29.5조원	4/4분기 기준 (현재 통계 미취합) 4/4분기 기준 (현재 통계 미취합)
보험산업이 종합위험관리 산업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 촉진 및 신시장 개척 지원	신규상품 개발건수 : 28건	'07상반기 현재 28.6% (8건)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 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카슈랑스 및 교차 모 집 사전영향분석 : 2회	3/4분기, 4/4분기 예정
	보험사기 방지 노력의 강화	보험사기인지 시스템 적발실적 : 176건	보험사기 적발 총 58건 관련금액 129 억원('07.5월말 기준)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자본시장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수급기반 확충 및 각종 인프라 정비	증권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	선물거래 시스템 통합 (통합추진)	90%
		매매시스템의 단계적 통합 추진 (통합방안마련)	80%
		청산·결제시스템의 기능 효율화방안 마련 (효율화방안 마련)	마련 중
		DART 시스템개편 (시스템개편)	진행 중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전자증권제도 도입 (도입방안마련)	70%
		수수료 등 거래비용 절감 (매년 3년 평균 대비 3% 절감)	진행 중
		상장·매매 관련 제도 개선 (제도 개선)	50%
	경제 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시장수급기반 확충	기업공개 실적 (매년 3년 평균 대비 3% 증가)	14%
		해 외 우 량 기 업 과 의 상장주관계약 체결실적 (3건)	66.7%
	자본시장 인프라 수출 및 해외시장과의 협력 강화	자본시장 인프라 수출 (1건)	100%
		외국거래소 및 감독기구와의 협력 (1건)	100%
증 권 시 장 의 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감독제도 개선	시장친화적 감독체제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및 자율규제기구 기능 재편	시장친화적 규제 체제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제도 정비)	진행 중
		거래소 상장후 시장감시시스템 개편방안 마련 (방안마련)	마련 중
		자율규제기구 기능 및 역할 재편방안 마련 (방안마련여부)	30%
	공 시 제 도 개 선 및 국제공시기준 도입 검토	구조화증권 발행비율 (전3년 평균대비 1%증가)	47%
		불성실 공시법인 감소 (전3년 평균대비 감소)	35사(07.5말) *3년평균 : 96사
	증권관련산업의 건전성·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감독 강화	신증금융상품에 대한 선제적 감독방안 마련 (방안마련)	50%
		통합법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 및 효과적 대응방안 모색 (방안마련)	50%
		증권회사 검사방식의 획기적 개선 (증권회사 검사방식개선)	진행 중
		신용평가업 감독방안 마련 (방안마련)	30%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 실시	불공정거래 조사처리율 (조사처리건수/조사대상건수) -매년 66%이상	61.1% (상반기 조사처리율 40.3% / 연간 목표 조사처리율 66.0%) *07.6 현재 조사처리율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이유는 전년도 이월건수(92건)가 조사대상건수에 포함되어 나타나는 불가피한 것으로 연간기준으로는 목표치 달성 가능 예상
	불공정거래 규제 제도의 선진화	불공정거래 규제제도 개선 -07년중 증권거래법 개정	진행 중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 및 교육·홍보 강화	불공정거래조사지원시스템 개편 -07년 중	진행 중 - 조사지원시스템 개발의뢰 (07.6)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제도를 선진화	회계기준의 국제 정합성 제고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 따라 회계 기준 정비 - 기준제정	로드맵 이행사항 점검 1차 T/F회의 개최완료 국제회계기준 초벌 번역 완료 등
	기업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원활한 정착 지원	중소기업 내부회계 관리 제도 모범규준 제정 -모범규준제정	100%
	회계감리 강화	감사보고서감리실시율 -100%	178사 종료 (63.6%)
		품질관리감리실시율 -100%	4개사 종료 50%
	경쟁력 있는 회계인력 양성 지원	새로운 시험제도에 따른 공인회계사 배출 - 100%	50%
		회계제도 및 감리 사례 홍보 및 교육 실시 - 4점	설명회(5회), 강의(8회) 실시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실화 도모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	CB집중 공공 정보수 증가를 위한 법률개정 실적 - 1건이상	신용정보법개정안 입법예고(07.6)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	국책은행 등을 중심으로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연간8.4%이상	'07년 1~5월간 '06말 대비 9.7% 증가(100%)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내실화 도모	은행의 중소기업 워크 아웃 실적 -연체율에 따라 변동	229개사(46%) * '07.3말 연체율1.4%로 연간 500개사이상
서민의 다양한 금융수요 충족을 위해 금융공급 여력 확충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지속 추진	저축은행 BIS비율 -9.1	9.7(107.8%)
		신협 순자본비율 -2.1	2.9(138.1%)
	서민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비 율 -12.5	9.5(131.6%)
	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 확충 지원	저축은행 총자산 증가율 -13.9%	5.3(38.1%)
		신협 총자산순이익률 -0.31%	0.18(58.1%)
	사금융 수요의 제도권 흡수 및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	서민맞춤대출안내실적 -28,000	64,649(230.9%)
		불법 대부업체 수사기관 통보실적 -190	117(61.6%)
고령화 시대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 적극 지원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정착 유도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규모 -전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규모 이상	'06년 적립금 증가규모 : 7,361억원 '07년 적립금 증가 규모 (1~4월) : 3,268억원 달성률 : 44.4%
	노후대비 관련보험 상품 활성화 지원	노후대비 상품판매 규모 - 34.6	자산연계형 연금보험 상품 개발 지원 -특별계정 처리 및 공시 기준 마련('07.6 감독 규정 개정) 상품판매규모 - 4/4분기
	고령자에 대한 현금흐름 지원을 위한 역모기지 활성화 지원	역모기지 취급규모 -전3년 평균규모 이상	7월부터 판매예정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 근절 노력 지속	증권투자자 보호를 위 한 광고 및 전문인력 관련제도 개선	영업준칙 정비 -영업준칙 정비	50%
		전문인력 자격제도 정 비 -규정개정	30%
	펀드 판매의 투자자 적합성 제고	표준판매권유시스템 개발 -표준판매권유시스템 개발	판매행위준칙에 반영 -해외투자 변동 위험 고지 및 투자자의 확인서명 의무 등 달성률 : 50%
	보험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및 판매· 광고 행위 감독 강화	공시대상 보험상품 건수 - 공시대상 보험상품 건수 (550건)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보험상품별 표준 상품설명서를 마련· 시행(07.3월) 상품심사·민원 등을 통해 지속 발굴·개선 -'07년 상반기 중 21건 변경권고 공시대상 보험상품 건수 4/4분기
금융이용자의 합리적 선택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국민참여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지속 개발· 운영	국민참여형 금융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실적 - 33	40% (13회 실시)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확대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등 실시 실적·만족도 지수 - 140	110회 실시 (만족도 조사는 연말 실시계획)
민원처리체계를 혁신하여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	효율적인 민원처리시스템 마련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 2%이상단축	1.7%증가
	금융회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민원 감축	금융민원발생 증가율 - 3% 미만 증가	16.3% 증가
	민원제도를 수요자 관점에서 지속개선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 융교육·상담 만족도 - 700	조사중 (4/4분기)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달성 비율
감독서비스의 품질관리를 통해 정책 만족도 지속 제고	사전예방적 검사시스템 정착을 통한 검사 효율성 제고	상시감시 Best Practice 개발 -BP개발	상시감시사례집준비 (측정불가)
		RM정보마당 등록건수 - 840	'07.6.22현재 401건(48%)
	맞춤형 검사업무 확대실시 및 제도 운영의 내실화 도모	경영컨설팅 실시 건수 - 10	'07년 상반기 4개사(40%)
	감독당국의 권위적· 경직적 이미지 타파를 위해 이미지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 추진	페이지뷰 횟수 - 3만	페이지뷰 7만건 (배너광고노출 총횟수 700 만회의 00%으로 목표 대비 234% 초과달성

III. 향후과제

- 정책품질관리대상 등 주요정책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가위원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적극 지원
 - 수시로 관련 정책자료를 송부하고 소관 실무자의 연락처를 통보하여 필요시 평가위원이 직접 실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
 - 3/4분기 실적점검도 상반기실적 점검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하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정책의 추진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
- 특히 통합성과관리시스템 확대·개편 추진 등 평가 및 점검결과의 환류를 강화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이행실적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
 - 자체평가결과의 환류방안(성과급, 인사 등)도 자체평가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

5. 2007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

1. 상담 현황

□ 2007년 1~9월 민원상담 건수는 총 163,7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13,035건) 증가

상 담 현 황

(단위 : 건, %)

구 분	2006년 1~9월		2007년 1~9월		증 감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증감률
은 행 권	77,621	51.5	68,636	41.9	△8,985	△11.6
보 험	67,490	44.8	57,698	35.2	△9,792	△14.5
증권·투신	5,586	3.7	6,631	4.1	1,045	18.7
기타	-	-	30,767	18.8	-	-
계	150,697	100.0	163,732	100.0	13,035	8.6

주) 기타 : 타기관 관할 상담, 상속인 조회관련 문의, 전화사기사건 신고 등 ('07년 4월 신설)

2. 민원처리 현황

□ 2007년 1~9월중 민원처리 건수는 총 48,26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3,650건) 증가

금융권역별 민원처리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6년 1~9월		2007년 1~9월		증 감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증감률
은 행 권	22,903	51.3	22,084	45.7	△819	△3.6
보 험	19,502	43.7	23,687	49.1	4,185	21.5
증권·투신	2,213	5.0	2,497	5.2	284	12.8
합 계	44,618	100.0	48,268	100.0	3,650	8.2

주) 인터넷·서류민원 및 Q&A 기준

6. 2006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2007. 2.

금융감독위원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1.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소관

- (1) 카드회사의 신용보호서비스를 삼성카드가 독점하고 다른 카드회사가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 또는 감독규정의 미비로 생각함. 이와 관련 재경부와의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 147
- (2) 칼라일, 뉴브릿지, 론스타 등 국제사모펀드가 국내에 들어와 긍정적인 기여도 하였지만 상당 부분 국부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7
- (3) 외환은행이 외환카드가 영위하던 보험대리점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를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계속 수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시 감독당국의 권고로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포기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고 법령에 위반한 것임.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 148
- (4) 외국동전의 환전과 관련하여, 해외 출국자가 증가함에도 외화 동전의 환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의 외화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서 조차 동전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후 보고할 것 149
- (5) 10.9 북핵 사태 당시 우리나라 선물시스템 오류와 관련, 증권 선물거래소가 마련하고 있는 백업시스템 구축계획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9

- (6) 자료에 따르면 법적근거 없이 금융기관 임직원을 문책한 건이 1,500명이나 됨. 금감위·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제로베이스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함.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책임은 회피하면서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 등 유형별 현황과 각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할 것 150
- (7) 카드사가 연체시 소멸시킨 포인트를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 회복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 카드포인트에 대한 종합의견을 검토해서 제출할 것 151
- (8)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과정에서 공시위반 의혹과 시장 혼란 우려가 제기됐는데, 금감원은 향후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52
- (9) LG카드가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탈퇴건수가 월 평균 5~6만건이다가 9월에 10만건, 10월에는 불과 15일만에 10만건을 넘었음. 이는 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이후 해지자를 탈퇴자로 급히 바꾸느라고 발생한 결과로 생각하는데 사실 확인 후 보고할 것 153
- (10) 수도권약품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수사종결 사항을 제출·보고할 것 153
- (11) 참여정부 들어 서민금융기관이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된 불법 대출 자료를 제출하고, 권력형 게이트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54
- (12) 산업은행 임직원의 고액연봉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5
- (13)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자주 바뀌어 예측가능성이 적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데, 거시경제적 지표 등을 포함한 예측가능한 지표를 제시할 것 155

- (14)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안이 공정하지 못하게 나올 경우 계약자 대표를 포함한 중립적인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모형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156
- (15) 개인의 신용정보가 남용되는 문제의 원인이 정보의 등급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동 사안에 대해 신용정보 조회건수에 대해 은행과 연합회에 자료 요청한 바 있으나, 통보해 온 내용이 틀림. 은행연합회에서는 자료이용 목적에 따라 코드로 관리하는데 “기타”로 분류된 것이 있음. 이 “기타” 때문에 누구나 다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지금 이 순간에도 신용정보가 새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56
- (16) 현재 주택담보대출금액 250조원으로 연간 예산인 238조를 넘어설 만큼 위험한 상황임. 미국은 보험가입, 신용 및 소득을 고려하여 담보대출을 하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담보 가치만 볼 뿐 신용, 소득은 보지 않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7
- (17) 보험사의 실태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고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재래시장의 보험가입을 위해 위험 공동인수 방안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158
- (18) 보험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해장애인 보험 판매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함. 보험사가 정부 정책에 잘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8
- (19) 공정위·금감위 등 정부기관의 이중규제로 인해 기업이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9

- (20) 신용정보조회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9
- (21) 금감원에서 추진중인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기준 자기자본(RBC)제도 도입이 보험회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0
- (22) 10월 9일 발생한 잘못된 선물시세 공표로 인해 투자자와 증권회사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소재가 결정되지 않은 것과 비상시 금융시장 위기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의 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0
- (23) 외제승용차의 증가로 인해 국산승용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부담하는 대물보험금의 담보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1억 이상(무한10억 등)으로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1
- (24)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현재 작성중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가 아닌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근거로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금융기관에 의한 신용정보 조회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보고할 것 162
- (25) 단순히 현재의 권역별 주택담보비율 현황이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선진국 보다 낮음을 근거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외국에 비해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금감원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63
- (26) 해외에서 담보대출시 차주의 신용을 심사하는 단계가 우리의 10등급과는 달리 900점을 만점으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도입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후 보고할 것 ... 163

- (27)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각종 시스템적 안전장치(모기지보험, 주택보유자보험 등)를 갖추고 있어 단순히 주택값이 폭락하더라도 부동산시장 전체나 미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시스템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 164
- (28) 신탁중앙회에 지원되는 3,000억원이 과연 현재 신탁중앙회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지적하고, 그에 앞서 신탁자체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64
- (29) 금감위 임직원 상반기 업무평가 결과 '가' 등급을 받은 임직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165
- (30) 펀드의 판매보수가 운용보수보다 많고, 미국에 비하여 판매보수가 2배이상 높기 때문에 펀드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 이러한 펀드보수체계를 미국과 같이 수수료체제로 전환하고, 펀드 판매보수를 낮추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66
- (31)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되고 사법처리가 되었음. 특히 좋은저축은행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실행된 불법과 부실화를 금감원에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하거나 감사로 재취업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 ... 166
- (32) 민원에 대한 민원대상인 해당금융기관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이첩 및 자율조정은 오히려 해당 금융기관과 금감원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됨. 때문에 금감원은 민원(民願)이 민원(民怨)이 되지 않도록 민원제도를 개선·보완할 것 166

- (33)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167
- (34)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168
- (35)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직원의 해외 MBA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금감원이 스스로 만든 연수세칙 규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69
- (36) 지하철 지하상가·재래시장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170
- (37)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의 우회상장 관련하여 하지원은 자기자금으로 참여한 것인지, 경영참여 의사가 있었는지, 계좌추적 했는지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미제출 사유를 제출할 것 170
- (38)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와 팬텀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은, 금감원이 검찰 법원 등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해서이며 금감원은 검찰통보 및 고발사건의 처리 결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통보 및 고발사건의 사후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171
- (39) 수도권약품공업은 대주주가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으나, 금감원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대주주가 언론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신종 주가조작이 등장한 바, 금감원은 관련사실을 철저히 공개하고 신종주가조작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173
- (40) 외국기업만 이중과세방지, 금산비분리 허용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국내 대기업은 강하게 규제받고 있어 역차별 받고 있으므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조치를 시정할 것 ... 173

- (41) SC제일은행의 이사 구성원 중에 집행임원 4명중에는 내국인 이사가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는 독립법인으로 토착 경영을 하지 못하고 책임경영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 173
- (42) SC제일은행 등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후속 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 174
- (43) SC제일은행의 국내기업정보 해외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결과 보고할 것 174
- (44)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Free board 시장에서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마련 후 결과 보고할 것 175

2. 자산관리공사 소관

- (1) 기금 청산시 발생하는 잉여금의 국고 귀속방안을 마련할 것 ... 175
- (2)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하여 부실채권을 초과하여 인수한 배경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 176
- (3) 공사 비상장 물납주식 처분결과와 재경부 물납 금액 대비 세입실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77
- (4) 채권 추심시 과잉·불법추심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77
- (5) 부진한 해외부실채권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78
- (6) 공사의 경영혁신계획과 미래비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 179

'06년 국감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

1.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소관

시정 · 처리요구사항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 카드회사의 신용보호서비스를 삼성카드가 독점하고 다른 카드회사가 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 또는 감독규정의 미비로 생각함. 이와 관련 재정부와의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회사의 신용보호서비스(DCDS) 취급과 관련하여 재정부와 협의 진행중</p> <p style="margin-left: 20px;">* DCDS : 신용카드회사가 회원으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납부받고, 회원이 사망, 질병, 실업, 자연재해 등 사고 발생시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 하는 서비스 (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p> <p style="margin-left: 20px;">○ 대출자의 사망, 질병시 채무를 면제하는 신종 서비스는 보험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어, DCDS 허용여부에 대해 금감위 · 재정부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상태</p> <p><input type="checkbox"/> 최근 신용보호서비스 등 신종금융상품의 출현으로 신종금융서비스와 보험계약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p> <p style="margin-left: 20px;">○ 신종금융서비스와 보험계약간 구분기준을 포함하여 재정부와 DCDS 허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 협의할 예정</p>
<p>(2) 칼라일, 뉴브릿지, 론스타 등 국제사모펀드가 국내에 들어와 긍정적인 기여도 하였지만 상당 부분 국부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당국은 국내 · 외 자본을 동등하게 관리감독하고 있음</p> <p style="margin-left: 20px;">○ 국제화 · 개방화, 동북아경제중심지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장려하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p> <p style="margin-left: 20px;">○ 연기금의 활용, PEF의 활성화 등 국내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중</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 외환은행이 외환카드가 영위 하던 보험대리점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를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계속 수취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민은행·국민카드 합병시 감독당국의 권고로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포기한 것과 형평에 맞지 않고 법령에 위반한 것임.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 할 것</p>	<p>□ 외환은행의 보험대리점 수수료 수취 경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에 흡수합병('04.2월)되어 보험대리점(Tele-Marketing 영업)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외환은행이 라이나생명 및 ACE 아메리칸화재보험 한국지점으로부터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계속 수취하고 있는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대리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 전에 모집된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한 '보험대리점 계약서'에 의한 것임 ○ 반면, 과거 국민카드가 라이나생명 등으로부터 수취하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흡수합병('03.9월) 이후 국민은행이 더 이상 수취하지 못하는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대리점 계약해지 사유가 국민카드에게 있는 경우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다는 내용이 '보험대리점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 신한생명 및 SK생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함으로써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제3항에 의거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국민은행의 귀책이라고 판결('05.12.15 및 '06.1.11)함에 따라 - 라이나생명 등으로부터 수취하던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포기하였기 때문임 <p>□ 은행법, 은행법시행령 등 위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에 합병되기 전에 Tele-Marketing 영업을 통하여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채권을 외환은행이 승계하였기 때문에 외환은행의 수수료 수취는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은행업무의 범위)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4) 외국동전의 환전과 관련하여, 해외 출국자가 증가함에도 외화동전의 환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의 외화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에서 조차 동전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후 보고할 것</p>	<p>□ 인천공항 등 개항장 및 주요 거점 점포에서 '06. 11월 이후 외국동전환전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p> <p>□ 또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외국통화자료실)에 '외국동전 환전 사용방법 안내' 및 '은행별 외국동전환전 가능 점포 안내' 자료를 게시 ('06.12.15)</p> <p>< 외국동전환전 서비스제공을 위한 주요 개선 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등 개항장의 외국동전환전 서비스 개시('06.11.1~1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우리, 신한, 외환) - 김포공항(신한) - 김해공항(신한, 부산) - 대구공항(대구) - 제주공항(제주) ○ 은행연합회의 외국동전환전 안내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동전 환전시 사용방법 등 참고사항 기재 - 은행별 외국동전환전 가능 점포 게시 (총 12개 은행 :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외환, 한국씨티, 농협, 기업, 대구, 부산, 제주)
<p>(5) 10.9 북핵 사태 당시 우리나라 선물시스템 오류와 관련, 증권 선물거래소가 마련하고 있는 백업시스템 구축계획이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증권선물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은 크게 유가증권시스템, 코스닥시스템, 선물시스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시스템과 코스닥시스템은 백업시스템(DR*)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saster Recovery system, 재해복구시스템 ○ 선물시스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시스템이 완료('09.1. 예정)된 후 백업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선물시스템의 백업시스템 구축 지연 사유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현재 운영중인 선물시스템에 대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약 235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며, 차세대시스템 개발 완료 후 동 백업시스템은 사용이 불가하게 되고, 사용기간도 1년 밖에 되지 않아 막대한 비용 낭비 발생</p> </div> <p><input type="checkbox"/> 이에 따라, 선물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고자 노력하고, 데이터 백업 및 원격지 소산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또한, 선물시스템의 오류 및 장애에 대비한 정기적인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하고 있음</p>
<p>(6) 자료에 따르면 법적근거 없이 금융기관 임직원을 문책한 건이 1,500명이나 됨. 금감위·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제로베이스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함.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책임은 회피하면서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 등 유형별 현황과 각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원은 2004년~2005년 기간중 총 990명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문책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 : 460명(해임권고 37, 직무정지 63, 문책경고 147, 주의적경고 213) *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는 저축은행·신협·농수축 단위 조합에 대한 문책조치임 ○ 직원 : 530명(면직 38, 정직 43, 감봉 181, 견책 268)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의 금융기관 임직원 문책조치의 법적 근거 및 범위는 금융업종별로 상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보험사·여전사·신탁회사 : 임원문책 중 경고(문책·주의적 경고)와 직원에 대한 조치 권한 보유 <p>(은행법 §54, 보험업법 §134①, 여신전문금융업법 §53④, 신탁업법 §26의2①,②)</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은행*·신협·농수축협 단위조합 : 임직원에 대한 조치권한 보유 (상호저축은행법 §24① 및 동법 시행령 §26①, 신용협동조합법 §84①, §95 및 동법 시행령 §24①) * '06.5.3,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06.8.4 시행)으로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조치 권한 및 직원에 대한 면직조치 권한은 금감원에서 금감위 권한으로 변경되었음 ○ 증권·종금·금융지주 : 금감위가 조치권 행사 (증권거래법 §53⑤ 및 동법 시행령 §36의5,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2①, 금융지주회사법 §57①) □ 참고로 2004.2월~4월중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금감원이 금융기관 임직원(1,500명)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문책조치하였다'고 지적하였는 바 ○ 이는 1999.4월~2002.11월 기간중 금융관련 법상 위탁근거 없이 금감원장이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조치한 실적임 □ 이에 따라 2003년부터는 금융관련 법령상 금감원에 대한 제재권한의 위탁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금감위가 직접 제재조치권을 행사하고 있음
<p>(7) 카드사가 연체시 소멸시킨 포인트를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 카드 포인트에 대한 종합의견을 검토해서 제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인트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중 ○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 카드사의 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대책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다만, 포인트 마케팅은 카드사의 자율 영업 사항인 만큼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p> <p>○ 감독당국은 운영상황을 모니터링·지도</p> <p>< T/F 진행 상황 ></p> <p>○ 참석자 : 8개 카드사*, 소비자단체(YMCA, 소비자보호원), 여전협회, 김재홍 의원실</p> <p>* 비씨, LG, 삼성, 현대, 롯데, 신한, 국민, 외환</p> <p>○ 진행경과 : '06.12월부터 '07.2.7. 현재까지 6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계속 진행 중 ('07.2.14. 7차회의 개최예정)</p> <p>○ 주요 논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인트 관련 주요내용을 약관에 명시 - 기타 포인트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 중
<p>(8)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 과정에서 공시위반 의혹과 시장혼란 우려가 제기됐는데, 금감원은 향후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p>	<p>□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토록 하고 있음(법§186①)</p> <p>○ 롯데쇼핑의 경우 우리홈쇼핑 주식취득 계약을 2006.8.2.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이를 당일 신고하였으므로 공시위반으로 보기 어려움</p> <p>□ 향후 감독당국은 신뢰받는 투명한 증권시장을 만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에게 중요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공시토록 하고</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지연 등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 □ 또한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해서도 상장법인의 공문 등에 대한 조회공시를 강화토록 하여 중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시되도록 할 것임
<p>(9) LG카드가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탈퇴건수가 월 평균 5~6만건이다가 9월에 10만건, 10월에는 불과 15일만에 10만건을 넘었음. 이는 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이후 해지자를 탈퇴자로 급히 바꾸느라고 발생한 결과로 생각하는데 사실 확인 후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카드에 대한 신용카드회원 정보관리실태 점검결과 '06.9~10월중 탈퇴회원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은 ○ '06.9월중 실시한 은행연합회와의 정보대사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은행연합회 탈퇴(유효기간 만료회원)통보가 누락된 탈퇴자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추가 통보한 데 기인한 것으로 확인 <p>< 추가 통보 인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9.27 : '06.8월 만기회원 45,230명 - '06.10.4 : '04.3월 만기회원 34,937명 <p>※ LG카드는 탈퇴·해지 구분 운영을 '06.11월 폐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당국은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LG카드에 “기관주의” 조치함과 아울러 카드사와 은행연합회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대사하도록 지도하였음('07.1월)
<p>(10) 수도약품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수사종결 사항을 제출·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선물위원회는 수도약품공업(주)의 한스바 이오메드(주) 인수 사실이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에 한 개인투자자가 수도약품공업(주) 주식을 취득한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06.7.19) 하였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하였음('06.12.20)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11) 참여정부 들어 서민금융기관이 권력형 게이트와 관련된 불법 대출 자료를 제출하고, 권력형 게이트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p>	<p>□ '권력형 게이트'의 의미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음. 다만, 골드뱅크 인수를 추진하였던 '김홍주'씨와 관련된 저축은행 대출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삼주산업에 동일인대출한도를 24억원 초과하여 111억원을 대출 → '02.11월중 검사 실시하여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 임직원 4명 제재조치 ○ 새누리저축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삼주산업에 동일인대출한도를 103억원 초과하여 174억원을 대출 → '02.12월중 검사 실시하여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 임직원 3명 제재조치 (검사기간중 한도초과분 전액 해소) <p>□ 감독당국은 저축은행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에 의한 불법대출 취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하고 추진중에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은행 위법·부당행위 조기 발견 및 재발 방지방안 마련('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은행 주식취득내역 국세청 통보 -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이상징후거래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대주주에 대한 적격유지 심사제도 도입 추진 - 저축은행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추진 - 노트북을 이용한 여신검사지원시스템 개발·운영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은행 인수시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자를 자격심사 대상에 포함 - 저축은행 임원 결격사유 확대(해임·징계면직된 자→금감위 조치<직무정지 등>를 받은 자) - 당해 저축은행 주식매입자금 대출금지 등 * 입법예고('06.10)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에 既 반영
(12) 산업은행 임직원의 고액 연봉은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당국은 산업은행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은행법」 제47조,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제35조의2 내지 제35조의14 ○ 산업은행 임직원의 임금 등 내부경영에 관한 자율결정사항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산업은행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에는 시중은행과 달리 「경영관리의 적정성」 부분을 제외하고 있음 □ 다만 2006년 종합검사시 인센티브성과급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 앞으로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공기업의 임금은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지침'을 적용받아 방만한 임금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13)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자주 바뀌어 예측가능성이 적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데, 거시경제적 지표 등을 포함한 예측가능한 지표를 제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평가하기 위하여 개인금융부채 대비 가처분소득 추이,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추이, 가계대출규모 대비 총당금 비율(Coverage ratio)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1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차주별 소득분포 및 부채규모 등에 대한 통계를 대폭 확충 - 기존의 부정기 통계(14종)를 정기 통계로 전환하고, 신규 통계(32종)를 추가(총 46종 추가)
<p>(14)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안이 공정하지 못하게 나올 경우 계약자 대표를 포함한 중립적인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모형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1.5일 상장자문위가 최종입장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를 토대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음 □ 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규정을 제출하면, 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
<p>(15) 개인의 신용정보가 남용되는 문제의 원인이 정보의 등급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동사안에 대해 신용정보 조회건수에 대해 은행과 연합회에 자료 요청한 바 있으나, 통보해 온 내용이 틀림. 은행연합회에서는 자료이용 목적에 따라 코드로 관리하는데 “기타”로 분류된 것이 있음. 이 “기타” 때문에 누구나 다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지금 이 순간에도 신용정보가 새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지점·점포별로 부여된 고유ID로 은행연합회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후 조회목적화면에서 특정목적*을 입력하는 과정을 거침 * 본인조회/여신심사/신용카드심사/공공목적/추심/기타 등 6개 ○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는 조회목적 중 ‘기타’를 초기값으로 설정함으로써 직원들이 여타 조회목적은 입력하지 않을 경우 ‘기타’ 코드가 자동 선택되도록 운영함으로써 ○ ‘기타’ 목적으로 조회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과다 신용조회 및 신용정보 불법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감독당국은 은행연합회에 대해 조회코드를 세분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토록 지도하였으며,</p> <p>○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조회코드를 기존의 6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여 '07.3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임</p> <p>* 본인조회/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신용카드심사 및 사후관리/법원제출/조세관련제출/기타 법률관련 제출/민원/채권추심</p> <p>□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신용정보 조회 시</p> <p>○ 특정 조회목적코드를 초기값으로 설정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관행을 시정토록 하는 한편, 조회목적에 따른 해당코드를 정확히 입력토록 지도하겠음</p>
<p>(16) 현재 주택담보대출금액 250조원으로 연간 예산인 238조를 넘어설 만큼 위험한 상황임. 미국은 보험가입, 신용 및 소득을 고려하여 담보대출을 하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담보가치만 볼 뿐 신용, 소득은 보지 않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감독당국은 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담보 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을 마련('07.1.31)</p> <p>□ 국내 금융경제 여건과 금융소비자의 수용능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우선은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신규대출을 대상으로 '07.3.2.부터 실시하고,</p> <p>○ 향후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로드맵(Road Map)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주요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리스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담보가 충분하더라도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 ○ 채무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 지표와 적용기준 마련, 운영 등
<p>(17) 보험사의 실태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고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재래시장의 보험가입을 위해 위험 공동인수 방안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p>	<p>□ 재래시장의 경우 화재 취약성 등 위험이 높아 개별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 공동인수추진을 위하여 재래시장의 보험가입 의무화 및 국가재보험* 운영 등을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에 건의('06.11.)</p> <p>*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일정비율(예: 150%) 이상일 경우 그 초과 손해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p>
<p>(18) 보험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불평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보험 판매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함. 보험사가 정부 정책에 잘 따르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장애인 전용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추가 소득공제혜택(100만원)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낮은 소득수준, 적극적인 홍보 미흡 및 보험수요에 비해 미흡한 담보내용 등으로 인해 판매실적이 저조 <p>□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보험의 홍보 강화 등을 통한 판매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06.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 판매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및 보장내용의 현실화 등을 통해 판매활성화 유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장애인보험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용보험 가입의 실효성 확보 및 판매 활성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 판매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및 보장내용의 현실화 등을 통해 판매활성화 유도 * 협회 및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보험 가입제도 및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 안내 실시('07.2) ○ 장애인에 대한 각종 통계(입원, 질병발생률 등) DB 축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위험률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DB를 확보하는 경우 이를 통해 위험률을 산출, 다양한 장애인보험 상품의 개발·판매 유도
<p>(19) 공정위·금감위 등 정부기관의 이중규제로 인해 기업이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경쟁당국과 금융감독당국간 이중규제에 따른 문제점, 해외사례 연구 등 기초조사를 마무리('06년)</p> <p><input type="checkbox"/> '07년중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 등과 협의할 예정</p>
<p>(20) 신용정보조회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에서 고객 신용도 평가시 신용조회 기록 반영여부 등은 자체 리스크관리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p> <p><input type="checkbox"/> 다만, 신용조회기록이 과다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객이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음</p> <p>○ 우선, 비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에 이와 같은 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체에 대해 조회기록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토록 하였으며(05.11,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 ○ 동 사항을 전 권역의 금융회사가 이행하도록 지도를 강화함(06.10) □ 또한, 재경부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조회시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신용정보법」을 개정할 예정(07년중)
<p>(21) 금감원에서 추진중인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기준 자기자본(RBC)제도 도입이 보험회사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RBC제도와 관련하여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제도 도입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 국내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 업계·학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충분한 시험운영을 거칠 예정이며, ○ 시행시기도 국내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계획
<p>(22) 10월 9일 발생한 잘못된 선물시세 공표로 인해 투자자와 증권회사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소재가 결정되지 않은 것과 비상시 금융시장 위기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10.9 코스콤(주)의 KOSPI200 지수선물(12월물) 시세제공 오류 원인은 코스콤 내 지수선물분배시스템의 데이터 송수신용(I/O) 메모리 부족인 것으로 확인 * 동 시간중 선물거래법상 시세공표의 책임이 있는 거래소가 산출한 시세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제공 ○ 코스콤은 KRX가 산출하는 시세정보의 1차 이용자로서 KRX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간접이용자(증권사 HTS 등)에 제공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콤과 KRX간 체결한 계약내용 및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스콤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소는 코스콤의 모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 업무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법상 시세공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 거래소로 하여금 코스콤의 정보분배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권고하고 장기적으로 시장정보 분배채널의 다양화를 유도('06.10월) ※ 코스콤은 동일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 직후 송수신용시스템의 메모리를 확장하였으며(128M → 256M) 주요 프로그램의 취약 예상부분을 점검하고 교체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스크 업그레이드 교체완료(9G→18G) : '06.12월 - 現 지수선물분배시스템 교체 예정 : '07.8월 □ 한편, 거래소 선물시장의 경우 현물시장과 달리 백업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09.1월 예정) 백업시스템도 가동할 예정
<p>(23) 외제승용차의 증가로 인해 국산승용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부담하는 대물보험금의 담보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1억 이상(무한10억 등)으로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타인의 차량 및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 손해배상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이상의 대물배상 보험가입을 의무화('05.2.22부터) ○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됨 ※ 대물배상 가입금액별 가입구성비 : 3천만원 이하(54%), 5천만원(17%), 1억원이상(29%)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input type="checkbox"/> 최근 외제차 및 고급 국산차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차량을 파손할 경우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크고, 배상할 금액이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성도 커지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따라서 보험가입자들은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고, 또한 가입금액 인상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아 1억원이상 고액 가입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p> <p>※ 대물배상 보험료 : 3천만원(123천원), 5천만원(130천원), 1억원(133천원)</p> <p><input type="checkbox"/>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자의 대물 배상담보 가입시 보험가입금액 선택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유도할 예정</p>
<p>(24)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 정보 조회시 현재 작성중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가 아닌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근거로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금융 기관에 의한 신용정보 조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을 보고 할 것</p>	<p><input type="checkbox"/>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개설시 고객의 신용정보를 신용조회업자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는 내용 등에 대해 사전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나,</p> <p>○ 나중에 동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 금융회사 등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남용 및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 조회업자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지만,</p> <p>○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용 정보법」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5) 단순히 현재의 권역별 주택 담보비율 현황이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선진국 보다 낮음을 근거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외국에 비해 안정적 이다라고 하는 금감원의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 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p>□ 감독당국은 여신심사체계와 관행을 기존의 담보위주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은행의 여신심사 기능을 정상화 하기 위하여</p> <p>○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 선진화방안”을 마련('07.1.31)</p> <p>□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해당 대출금의 1차적 상환재원인 차주의 미래소득을 대출 취급 시점에서 평가함과 아울러,</p> <p>○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예 : 실직, 폐업 등)에 대비한 2차 상환 재원인 담보가치를 동시에 고려하는 등 여신심사체계를 선진화할 계획</p>
<p>(26) 해외에서 담보대출시 차주의 신용을 심사하는 단계가 우리의 10등급과는 달리 900점을 만점으로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도입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후 보고할 것</p>	<p>□ 모든 은행들은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해 신용평점시스템인 CSS(Credit Scoring System)를 구축하여 활용</p> <p>□ 한편, 동 시스템에서는 해외 주요국과 유사하게 차주에 대한 신용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있으며,</p> <p>○ 신용평가점수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신용평가 등급을 부여</p> <p>*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불량을 예측하는데 의미있는 설명변수를 도출하고 평점(scorecard)형태로 변환</p> <p>□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 ('07.1.31) 도입을 계기로</p> <p>○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기존의 담보위주에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로 전환함으로써</p> <p>○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강화를 유도함과 아울러 신용평가시스템의 精度와 여신업무에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27)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각종 시스템적 안전장치(모기지보험, 주택보유자보험 등)를 갖추고 있어 단순히 주택값이 폭락하더라도 부동산시장 전체나 미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시스템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모기지보험 도입 결정 및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경우(비투기지역, 국민주택규모 등) 보험 가입시 LTV 한도 상향 조정(60%→80%) <input type="checkbox"/>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06.12) <input type="checkbox"/>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발표(07.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보가치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DTI, 부채비율 등의 자율적 활용) ○ 은행권 자율적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2월중)한 후 3월부터 시행
<p>(28) 신탁중앙회에 지원되는 3,000억원이 과연 현재 신탁중앙회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지적하고, 그에 앞서 신탁자체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신탁중앙회의 누적손실은 원칙적으로 경영실패라는 점을 감안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측이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최대한도의 자구노력을 추진토록 하고 ○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가 곤란한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재정자금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정상화 방안을 추진중 <input type="checkbox"/> 이러한 원칙하에서 재정지원의 규모는 신탁업계의 경영여건 및 전망, 국가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측의 자구노력과 병행하여 흑자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한편 신탁중앙회는 금감위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강도 높은 자구노력방안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서를 제출('07.2.2, 금감위 기승인)하였으며</p> <p>○ 재정지원에 앞서 관계부처와 감독당국·신탁중앙회간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서'를 체결('07.3월)하여 신탁측의 경영 개선계획이행을 적극 유도하고</p> <p>○ 경영개선계획 이행성과를 보아가며 재정자금을 탄력적·단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탁측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예정</p>
<p>(29) 금감위 임직원 상반기 업무평가 결과 '가' 등급을 받은 임직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p>	<p>□ 금감위 소속 공무원은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평가를 하고 있음</p> <p>○ 동 지침에 따르면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로 수(2할), 우(4할), 양(3할), 가(1할)의 분포대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어 불가피하게 5급 27명중 2명을 가등급에 배정한 것임</p> <p>□ 가등급으로 평정된 2명중 1명은 금년 4월에 수습공무원에서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다른 1명은 임용후 근무기간이 짧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서 타 공무원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음</p> <p>○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가 빠른 시일 내에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0) 펀드의 판매보수가 운용보수보다 많고, 미국에 비하여 판매보수가 2배이상 높기 때문에 펀드소비자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음. 이러한 펀드보수체계를 미국과 같이 수수료체제로 전환하고, 펀드 판매보수를 낮추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p>	<p>□ 보수·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상호 대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p> <p>○ 외부전문가에 의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p> <p>※ 연구용역</p> <p>- 연구자 : 중앙대 신인석 교수</p> <p>- 일정 : '07년 3월말 완료 예정</p>
<p>(31) 금감원 출신인사들이 인수한 저축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되고 사법처리가 되었음. 특히 좋은저축은행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실행된 불법과 부실화를 금감원에서 찾아 내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인수하거나 감사로 재취업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p>	<p>□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수법이 날로 정교해짐에 따라 적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p> <p>○ 금감원 출신인사가 대주주인 좋은저축은행 등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감독·검사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검찰고발, 해임권고 등 엄중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음</p> <p>□ 앞으로 감독당국은 감사원 제척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등 금감원 출신인사가 인수하거나 재직 중인 저축은행에 대하여 더욱 엄정하게 감독·검사할 예정임</p> <p>* 금감원 출신인사와 일정기간 동일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검사원을 해당 금융회사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서 배제</p>
<p>(32) 민원에 대한 민원대상인 해당금융기관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이첩 및 자율조정은 오히려 해당 금융기관과 금감원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게 됨. 때문에 금감원은 민원(民願)이 민원(民怨)이 되지 않도록 민원제도를 개선·보완할 것</p>	<p>□ 감독당국은 접수된 민원을 가급적 직접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첩처리하는 민원비율이 '04년 27.3%, '05년 26.3%, '06년 2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p> <p>○ 그러나, 금융회사의 경영 등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은 감독당국이 개입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이첩 처리가 불가피한 점이 있음</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다만, 이 경우 이첩민원에 대한 금융회사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보이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p> <p>□ 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융회사와 민원인간의 자율적인 합의·조정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 간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민원 내용이 사실조사 및 판단 등을 필요로 하는 민원에 한하여 자율조정을 허용하고 있음 ○ 다만, 자율조정 대상이 아니거나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직접 처리하고 있음
(33)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p>□ 채권추심회사는 감독당국의 사전심사 및 행정 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교부받아 채무자의 최종주소지를 파악하여 추심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p> <p>□ 감독당국은 사전심사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법령상 점검사항인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 여부와 ○ 신용정보법상 추심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인 「상법」상 상사채권인지 여부 및 추심위임자가 금융회사 등 적법한 위임자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음 ○ 심사결과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를 대외비로 관리하는 등 주요 심사항목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향후 감독당국은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임점 검사시 주민등록전산자료 이용·관리실태, 개인 정보 유출방지 안전대책 이행여부 등을 중점 검사사항에 반영함으로써 사후적인 감독을 강화할 예정임</p> <p>□ 한편, 행정자치부도 주민등록전산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감독을 위해 전산자료를 교부 받은 자를 대상으로 전산자료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음</p>
(34)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p>□ 금감위와 금감원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을 구성('06.5월)</p> <p>○ 관계부처 정책간담회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06.6월~10월)</p> <p><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방지대책 주요내용 ></p> <p>□ 자동차 보험 손해를 악화에 대응하여 보험사기 정보공유 등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p> <p>○ 가격덤핑 등 외형위주의 과당경쟁과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는 하는 등의 감독강화</p> <p>○ 보험업계는 각종 수수료 및 경비절감 등 회사 스스로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경주</p> <p>□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금감원에 특별조사반을 신설하여 기획조사를 강화</p> <p>□ 공보험·각종 공제기관 등과의 공동조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input type="checkbox"/> 보험금 누수 억제를 위해 부채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 강화, 진료수가 체계 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등</p> <p>< 향후 추진계획 ></p> <p><input type="checkbox"/> 개별 추진과제별로 관계부처, 금융감독당국, 보험업계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p>
<p>(35)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분담금으로 직원의 해외 MBA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금감원이 스스로 만든 연수세칙 규정에도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p><input type="checkbox"/> 금융업무의 국제화·고도화에 부응하여 금융감독업무의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세칙 제32조*에 의거 해외 우수 대학에 금융감독업무에 긴요한 학술분야(예: 경영학, MBA, 경제학, 법학 등)로 연수를 실시코자 노력하고 있음</p> <p>* 연수세칙 제32조(해외학술연수) “해외학술연수는 경제학, 경영학(MBA 포함), 법학 등 감독원 업무발전에 긴요한 학술분야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실시”</p> <p><input type="checkbox"/>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외학술연수원이 미국 MBA위주로 편중 지원하는 경향이 많았으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미국 MBA 선발인원을 해외학술과정 모집인원의 50%로 제한하고 경영학, 경제학, 법학, IT 등과 같이 금융감독업무에 긴요한 학술지식을 다양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전공 할당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6) 지하철 지하상가·재래시장 등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특수건물의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p>	<p>□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따라 민영 손해보험회사에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10월말 현재 화보법상 보험가입 의무 대상인 특수건물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률이 95%로 대부분 가입된 실정 <p>□ 다만, 지하철 지하상가, 재래시장 등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일부 특수건물에 대해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시·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특수건물 화재보험 미가입자 현황을 통보하여 ○ 동 기관으로 하여금 인·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음
<p>(37)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의 우회상장 관련하여 하지원은 자기자금으로 참여한 것인지, 경영참여 의사가 있었는지, 계좌추적 했는지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미제출 사유를 제출할 것</p>	<p>□ 자기자금 여부, 경영참가의사 여부, 계좌추적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시, 금감원 조사담당자가 참고인 진술을 통하여 주요 판단사실 등에 대해 소명한 바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당국이 조사한 결과로는 하지원의 자금 대부분이 본인의 자금이 아니고 경영참여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 스펙트럼DVD 경영권 양수도 협상 과정 및 인수자금의 출처, 매매행태 등을 종합 판단해 볼 때 주가상승을 위해 하지원이 경영에 참가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첩하였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사실 관계 및 새로이 발견한 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자금의 계산주체를 하지원으로 보고 하지원에게 주식 인수당시에는 경영참가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무혐의 처리한 것임 <p>□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임의조사이고 조사의 수단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 내에서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는 있으나, 검찰의 강제조사 결과 및 추가 증거 확보에 따라 감독당국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p> <p>□ 동 건과 관련한 조사자료 및 계좌추적 관련 자료는 금융실명법상 제3자에 대한 자료제공이나 공개가 엄격히 금지되는 금융거래정보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p>
<p>(38) 태원엔터테인먼트 Spectrum DVD와 팬텀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결정을 받은 것은, 금감원이 검찰 법원 등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해서이며 금감원은 검찰 통보 및 고발사건의 처리결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관련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통보 및 고발사건의 사후처리결과를 보고하기 바람</p>	<p>□ 개별적인 조사사건에 대한 검찰과의 업무공조를 위하여 감독당국의 검찰에 대한 지원인력 파견, 검찰의 감독당국에 대한 법률자문관(현직 검사) 파견 등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에 법률자문관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p>□ 감독당국이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판결내용을 통보받는 것이 필요한데,</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임의조사로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사건은 가능한 한 모두 검찰에 통보하고 있으나 ○ 검찰도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즉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사건별로 처리 기간에 편차가 많이 있어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한 기록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 향후 감독당국에서는 주기적으로 검찰에 협조를 요청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법원의 판결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사건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공개판결문을 입수한 후 향후 조사업무에 반영할 계획임 <p>□ 이러한 감독당국의 조사결과, 검찰의 기소 여부, 법원의 판결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의 현행 조사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p> <p>※ 검찰이첩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리현황</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건)</p> <table border="1"> <tr> <th>처리유형</th><th>2004년</th><th>2005년</th><th>2006년</th></tr> <tr> <td>기소¹⁾</td><td>85</td><td>76</td><td>30</td></tr> <tr> <td>불기소²⁾</td><td>18</td><td>17</td><td>3</td></tr> <tr> <td>수사중³⁾</td><td>63</td><td>93</td><td>99</td></tr> <tr> <td>총계</td><td>166</td><td>186</td><td>132</td></tr> </table> <p>주 1) 구공판, 구약식 2) 무혐의,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3)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수사중 등</p>	처리유형	2004년	2005년	2006년	기소 ¹⁾	85	76	30	불기소 ²⁾	18	17	3	수사중 ³⁾	63	93	99	총계	166	186	132
처리유형	2004년	2005년	2006년																		
기소 ¹⁾	85	76	30																		
불기소 ²⁾	18	17	3																		
수사중 ³⁾	63	93	99																		
총계	166	186	132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39) 수도권약품공업은 대주주가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으나, 금감원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 대주주가 언론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신종주가조작이 등장한 바, 금감원은 관련사실을 철저히 공개하고 신종주가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p>	<p>□ 조사결과 및 혐의자에 대한 실명공개는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 혐의자의 명예와 신용 훼손 우려 등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어려운 측면이 있음</p> <p>□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신종주가조작으로 볼 경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과 충돌될 소지가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이런 사안을 주가조작으로 본 전례를 찾기 어려움</p> <p>※ 참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수도권약품공업의 대주주를 불공정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06.7.19)한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음('06.12.20)</p>
<p>(40) 외국기업만 이중과세방지, 금산비분리 허용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국내 대기업은 강하게 규제받고 있어 역차별 받고 있으므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조치를 시정할 것</p>	<p>□ 금산분리 원칙은 국내·외 법인에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음</p> <p>* 금산분리원칙은 범정부차원의 금산분리 로드맵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임</p>
<p>(41) SC제일은행의 이사 구성원 중에 집행임원 4명중에는 내국인이사가 1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는 독립법인으로 토착경영을 하지 못하고 책임경영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p>	<p>□ 은행의 이사회 구성원 선임문제는 원칙적으로 은행의 자율결정사항으로 판단됨</p> <p>□ 감독당국은 지난 '06.3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이사회내 집행위원회(4명)에 내국인 이사의 참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한 바 있으며</p> <p>○ SC제일은행은 동 집행위원회에 내국인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그룹본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p> <p>* '07.3월경에 개최예정인 이사회에서 내국인 이사의 집행위원회 위원 선임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42) SC제일은행 등 중소기업대출 비율 미준수 은행에 대한 후속조치 후 결과 보고할 것	<p>□ 감독당국은 '06년중 SC제일은행 등 5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시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한 바 있음</p> <p>* SC제일·대구·광주·제주·신한은행 (제주·신한은행은 현재 검사서 작성중)</p> <p>○ 점검결과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실적이 미흡한 SC제일은행 및 광주은행에 대해서는 동 내용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함과 아울러 유망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여신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였음</p> <p>(☞ 경영유의사항으로 조치)</p> <p>* '04.11부터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중소기업대출비율 준수여부'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있음</p> <p>□ 한편,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p> <p>*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감축 및 기존 대출금 회수 등(「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3조)</p>
(43) SC제일은행의 국내기업정보 해외유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결과 보고할 것	<p>□ SC제일은행이 리스크담당임원의 전결권을 초과하는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SC그룹본부(런던)와의 사전협의과정에서 여신신청업체(법인)의 일부 재무정보*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p> <p>* 매출액, 영업이익, 세후당기순이익, 총부채, 영업활동후 현금흐름 등</p> <p>○ 동 법인의 재무정보는 감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시장에 공시된 것이며</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에서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법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감독당국은 '06.3월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SC그룹본부와의 여신 협의과정이 사전승인 형태로 운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 ○ 또한 지난 '06.10.20. 국정감사시 SC제일은 행장(존 필메리디스)도 SC그룹본부와의 여신 협의시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SC제일은행의 국내 기업정보 해외유출방지 노력 및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임
(44)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Free board 시장에서의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마련 후 결과 보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ee Board 활성화방안 마련('0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조성인(market maker) 제도 도입 ○ 코스닥 상장시 혜택 부여 등 정규시장과 가교역할 강화 ○ 공시·퇴출요건 완화 등 Free board 기업부담 경감

2.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 기금 청산시 발생하는 잉여금의	□ 현행 공사법상 기금 청산시 잔여재산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국고 귀속방안을 마련할 것</p>	<p>금융기관에 출연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현행의 배분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p>*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금(3.5조원),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3.7조원)</p> <p>□ '06.12.30자 공사법 개정으로 '03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 출연받은 3.5조원에 대하여는 상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청산시 잔여자산 배분과 관련하여 공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p> <p>* 계류중인 법안 내용(신학용 의원 대표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금의 잔여재산은 금융기관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의 재계산 결과에 따라 면제된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융자금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배분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재정융자특별회계가 지원한 융자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출연한 것으로 보며,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은 채무상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계산 후에 조기 반환할 수 있도록 함 ② 잔여재산이 각 출연금 및 융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여금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③ 각 출연금 및 융자금 반환한 이후에도 잔여재산이 있을 때 기여금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
<p>(2) 경영관리위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하여 부실채권을 초과하여 인수한 배경과 향후 재발방지</p>	<p>□ 공사는 '03년 신용카드사 부실채권이 금융시장에 심각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대책을 강구할 것	<p>대책"에 의거 대량의 카드채권을 매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따라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03년도 업무계획을 초과하여 부실채권을 인수 <p>□ 향후 재무건전성을 감안한 인수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업무계획 보다 부실채권 인수 규모를 초과하게 될 경우 경영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 또는 사후 보고를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음</p>
(3) 공사 비상장 물납주식 처분 결과와 재정부 물납 금액 대비 세입실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p>□ 비상장 물납주식은 거래시장이 없어 시장성이 낮은 한계성으로 물납금액 보다 낮게 매각 되는 것이 현실이나,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매각 홍보강화 방안을 마련 하여 시행할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일간지에 물납주식 매각 홍보 광고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1월중 광고 예정 ○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2월초 개최 예정 <p>* 비상장법인의 상당수는 소수의 친인척·지인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영세업체로 일반투자자 참여가 제한적</p> <p>□ 주식물납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부에 건의
(4) 채권 추심시 과잉·불법추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p>□ 공사 추심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관리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추심활동을 수행 토록 주기적 교육실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잉·불법 추심행위 수행직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 또는 직무성적 평가시 이를 반영 □ 추심위임업체에 대한 감독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정기간담회를 통한 과잉·불법추심 행위 예방교육 실시 ○ 부당한 업무처리 또는 과잉추심 발생시 업무량 회수, 추심사와의 계약해지 등 각종 제재 조치 가능토록 「채권직접추심 위임계약서」에 반영('06.12.1) □ 향후에도 공사는 건전한 추심문화의 정착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민원(민원신청 및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5) 부진한 해외부실채권사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7.20 공사법 개정으로 해외투자사업 수행근거는 마련(투자 방법·한도 등을 규정한 시행령은 '06.1.30 개정 완료) 되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한 내부규정 정비 및 투자위험관리를 위한 국외투자 위험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일정 기간 소요 □ '06년도 하반기 안정적인 해외부실채권 투자실행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친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발굴·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국내 4대 회계법인과 업무협력 MOU 체결(9.15) ○ 투자협의체 구성 및 JV-AMC 설립 등 중국 부실채권투자 사업 추진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10.26) ○ 원활한 투자자금 조성을 위해 공사 주도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국내 13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투자협의체 구성(12.15)</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중국 4대 국영 AMC 보유 부실채권 인수를 추진 중</p> <p>○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MOU 체결(07.1.15) 및 자산실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금년 상반기 중 중국 부실채권투자를 실행할 예정</p> <p><input type="checkbox"/> 아울러 공사는 고위험 해외부실채권투자 사업의 특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사업 추진</p>
(6) 공사의 경영혁신계획과 미래 비전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	<p><input type="checkbox"/> 공사는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2010 New 비전으로 “가치를 재창조 하는 글로벌 자산관리 회사”로 설정(06)</p> <p>○ New 비전과 전략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111조원의 인수·정리, 개인 신용불량자 약 36만명 지원, 국유재산 8만 필지 관리 등을 통해 축적된 객관적 역량과 인프라의 기반 하에 외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수립(05)</p> <p>○ 아울러, 실행력 제고를 위해 별도로 “비전 실행 TF팀”을 설치하여 사업, 조직, 인사, 성과평가 4대 부문으로 세분화한 35개 실천 과제를 선정(06)</p>
	<p>- 추진과제별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성·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장기 목표 실현의 가능성을 한층 높임</p>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div data-bbox="699 322 1444 607"> <p>□ '07년 현재 공사는 비전 및 전략의 실행 1 단계 연도부터 도약기반 구축을 위한 경영관리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 수립 시행</p> <p>○ '07년 경영목표*에 중장기 전략과제를 반영하여 수립('06.12) → 년중 추진</p> </div> <div data-bbox="715 651 1422 999"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07년 경영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자산관리회사로의 도약 •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 경영관리시스템의 혁신 • 고객만족경영의 실천 • 성과중심의 책임 경영 </div> <div data-bbox="699 1043 1444 1406"> <p>○ 전략과제별 역할과 책임 명확화를 위한 조직개편('07.1) → 사업별 본부 전담제 도입</p> <p>○ 조직·개인별 목표 부여 및 BSC(균형성과표) 적용('07.2)</p> <p>○ 전문인력의 채용 및 기존직원 업무 직군제 운영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착수('07.1~)</p> </div> <div data-bbox="699 1435 1444 1794"> <p>□ 비전 실행 성과의 철저한 점검 및 목표 재설정</p> <p>○ 공사의 주요 회의기구(이사회 및 전략회의)를 통한 정기적인 비전 및 전략의 성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행</p> <p>○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와 성과 미달시 별도 TF팀을 설치하여 실행목표 및 추진방향 수정</p> </div>